



연구보고서 19-24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대응 방안

한민수
김혁황
최혜린
박단비
김지수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대응 방안

한민수 · 김혁황 · 최혜린 · 박단비 · 김지수

연구보고서 19-24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대응 방안

인 쇠 2019년 12월 24일
발 행 2019년 12월 30일
발행인 이재영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주)유성사(02-2266-8785)

©20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322-1757-4 94320
978-89-322-1072-8(세트)



2018년 5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는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다국적기업의 최대 관심사는 수익성이며, 이를 위해 세계 어느 지역에서라도 자회사 철수를 망설이지 않는다는 점이 깊이 각인되었다. 인구구조의 변화, 신흥국의 부상 등 대내외적인 변화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진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세계경제 공급망에 대한 구조조정은 향후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다국적기업의 철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본 보고서는 제2장의 사례조사와 제3장과 제4장의 통계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마지막 제5장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제2장에서는 다국적기업 투자 철수사례 중 투자유치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① 까르푸의 한국시장 철수 ② GM의 군산공장 폐쇄 ③ 미쉐린의 일본 오타공장 폐쇄 ④ GM홀덴의 호주사업 철수의 네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국적기업은 수익성 악화와 본사의 경영전략 변화에 따라 공장폐쇄를 결정했다. 공장폐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과 정부의 협상력에 있어서의 격차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다만 완전 철수보다는 디자인센터 등 연구관리부서와 물류센터 등 서비스 관리부서는 유지하며 해당 국가의 산업경쟁력에 맞추어 경영활동을 지속하였다.

특히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는 모든 철수사례에서 관찰되었다. 지역·산업 간 분산투자가 가능한 대기업 및 자본가와 달리 노동자와 중견·중소기업은 지역·산업 간 이동 및 투자의 제약이 커서 다국적기업 철수에 따른 충격에 좀 더 민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마련된 노동

시장의 제도화된 경직성이 오히려 다국적기업이 철수할 때 노동시장에 급격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철수기업이 수익성 악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고용 수준을 줄일 수 있다면 다국적기업의 철수 시점에서는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중 철수기업과 지속기업 간 창출하는 고용량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은 이 점을 시사한다.

제4장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이 국내기업의 고용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중간재를 공급하는 산업(후방산업)의 국내기업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한국GM의 구조조정이 장기화되고 르노삼성자동차의 생산절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최근 상황에서 다국적기업 철수의 파급효과에 대한 추정 결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품을 납품하는 후방산업의 국내 중소기업자들의 고용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의 진입·철수에 대응한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우리의 사례조사와 실증분석 결과는 관련 산업과 지역사회의 중견·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재고용과 업종 전환,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U의 세계화조정기금(EGF: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과 같이 자본이동 등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세계화에 대응하는 조정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등 미래산업의 육성을 위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이 이미 지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국적기업 철수 후 지역경제에 새롭게 진입한 중견·벤

처기업들의 상품을 조달시장을 통해 구매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방향이다.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약속된 국내투자 및 제반 지원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유치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현금 지원과 입지지원에 대한 환수규정을 상향 입법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4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16

제2장 다국적기업의 투자 철수사례 19

 1. 까르푸(Carrefour)의 한국 철수 21

 가. 까르푸의 한국 진출 21

 나. 진출 이후 까르푸의 재무현황 24

 다. 까르푸의 한국사업 철수 배경 26

 라. 한국의 반응과 현재 상황 27

 2.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29

 가. GM의 대우자동차 인수과정 29

 나. 인수 이후 한국GM의 재무현황 31

 다. GM의 한국사업 축소 배경 33

 라. 한국의 반응과 현재 상황 36

 3. 미쉐린(Michelin)의 일본 오타공장 폐쇄 39

 가. 미쉐린의 일본 진출 40

 나. 오타공장 폐쇄 전후 일본 타이어 산업현황 40

 다. 오타공장 폐쇄 배경 42

 라. 일본의 반응과 현재 상황 43

 4. GM홀덴(Holden) 호주 철수 44

 가. GM의 호주 진출 44

나. 호주사업 철수 발표 전후 GM홀덴의 경영상황	45
다. GM의 호주사업 철수 배경	47
라. 호주의 반응과 현재 상황	50
5. 소결	52
제3장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55
1. 투자자 국적·산업·지역별 분포	56
2. 철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성	58
3. 소결	62
제4장 외투기업 활동이 국내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63
1. 연구 배경	64
2. 기존 연구	66
3. 실증분석	68
가. 데이터	68
나. 분석모형	70
4. 실증분석 결과	75
5. 소결	79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81
1.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82
2. 다국적기업 철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86
가. 철수 시 발생하는 사회문제 공동 대응	87
나. 외국인 직접투자 유인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92

3. 연구의 한계	95
참고문헌	97
부록	107
Executive Summary	111



표 차례

표 2-1.	우리나라의 유통시장 개방 단계	22
표 2-2.	매출액 기준 한국 내 주요 할인점의 시장점유율 추이	26
표 2-3.	한국시장 내 자동차 내수현황	30
표 2-4.	현대 및 기아자동차의 영업이익	33
표 2-5.	한국GM의 주요 지역별 수출현황	35
표 2-6.	한국GM의 공장별 생산량 및 가동률	36
표 2-7.	산업은행 및 GM 간 협의내용	37
표 2-8.	2013년 이후 GM의 글로벌 사업장 철수 현황	47
표 2-9.	주요국의 2013년 자동차 실행관세율(Applied Tariff)	49
표 3-1.	상위 5개국 산업별 분포(2018년)	57
표 3-2.	지속기업과 철수기업의 평균값과 중간값 비교	60
표 4-1.	외투기업의 산업별 분포(2017년)	69
표 4-2.	외투기업의 지역별 분포(2017년)	70
표 4-3.	외투기업의 파급효과 변수 정의	71
표 4-4.	외투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 기초통계	74
표 4-5.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76
표 4-6.	외투기업이 수출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77
표 4-7.	외투기업의 사업 축소가 국내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78
표 5-1.	사례조사 요약표	83
표 5-2.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2014~18년)	85
표 5-3.	한국의 FDI 인센티브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93



그림 차례

그림 2-1. 까르푸의 전 세계 매장현황	22
그림 2-2. 까르푸의 한국 내 매장현황	23
그림 2-3. 까르푸의 재무현황	24
그림 2-4. 까르푸와 종합소매업의 재무현황 비교(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5
그림 2-5. 미국시장 내 주요 3개 사의 점유율 추이	30
그림 2-6. 한국 주요 완성차 기업의 한국 내 시장점유율	32
그림 2-7. 한국GM의 재무현황	33
그림 2-8. 한국 주요 완성차 기업의 생산비중 및 한국GM 생산량	34
그림 2-9. 일본 내 타이어 생산 개수 및 고무사용량 추이	41
그림 2-10. 세계 3대 타이어 생산기업의 매출액 추이	42
그림 2-11. 호주 내 시장점유율	45
그림 2-12. 호주 내 주요 완성차 기업의 생산량 추이	46
그림 2-13. 호주의 자동차 생산량과 무역가중 환율	48
그림 2-14. 주요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시간당 노동비용	49
그림 3-1. 대륙별 분포(2018년)	56
그림 3-2. 산업별 분포(2018년)	56
그림 3-3. 지역·산업별 분포(2018년)	58
그림 3-4. 외국인 투자기업의 진입과 철수 현황(2010~17년)	59
그림 3-5. 지속기업과 철수기업 히스토그램 비교(2016년)	61
그림 4-1. 외투기업의 국내지사	69
그림 4-2. 외투기업의 고용	69



글상자 차례

글상자 5-1. 프랑스 플로랑주법(The Florange Law)	88
--	----



부록 차례

부록 그림 1. 지속기업과 철수기업 히스토그램 비교(2010~15년)	108
부록 표 1. 산업코드 및 산업명	109
부록 표 2. 지역명 및 지역코드	110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18년 2월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간간이 들려오는 소식은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GM 등 다국적기업의 최대 관심사는 수익성이며, 수익성 유지를 위해서라면 세계 어디에서도 자회사 철수 등 세계경제의 공급망에 대한 구조조정을 망설이지 않는다는 점이 대중 사이에 각인되었다. 군산공장 폐쇄를 막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과 정부의 협상력에 있어서의 격차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계기였다.

현대중공업의 조선소 폐쇄에 이어서 군산공장의 폐쇄는 전후방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흥준 외(2018)에 따르면 직접 영향을 받는 사내인력만 1만 6,000명에 이르고 2차, 3차 협력사까지 포함할 경우 대략 15~20만 명의 노동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2023년까지 저장도 구조조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완전철수를 막기 위해서 우리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정을 투입한다 해도 완전철수로 이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으며, 실제로 한국GM의 연구개발 법인분리가 완전철수를 위한 한걸음이라는 의혹도 언론과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는 인구구조의 변화, 중국과 아세안 등 신흥국의 부상 등 대내외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거대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세계경제의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서의 우리의 역할과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도 지속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다국적기업이 수익성 유지를 위해서 세계 어느 지역이라도 진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세계경제의 공급망에서의 구조조정은 향후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다국적기업의 철수에 대응하는 현재 우리의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본 보고서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의 향후 정책대응은 세계화가 주는 장기적 이익과 단기적 부작용을 조화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국가 간 무역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진입과 철수 등 자본의 이동도 세계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의 한 가지 모습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세계화를 통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계층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따라서 상기한 대내외적 구조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다국적기업의 진입과 철수 등 세계경제의 공급망 차원에서 불가피한 구조조정을 왜곡시키는 방향보다는 구조조정은 주어진 것으로 보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향후 정책대응은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포용성도 강조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둘째, 다국적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중 철수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다국적기업의 철수의 원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추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예측은 우리의 정책적 대응방향이 어느 부분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유용한 근거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다국적기업이 철수할 경우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향이 대내외적인 제약조건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으로 인한 왜곡현상을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투자자유화와 투자보호를 동시에 지향해 온 국제투자법의 시각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근거로 철수를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제안되는 정책방향은 국내자본과 외국인자본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주어졌던 유인책이 발생시키는 시장교란 중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효과를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본 보고서는 제2장의 사례조사, 제3장과 제4장의 통계자료 분석, 그리고 마지막 제5장의 결론 및 향후 정책방향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다국적기업 투자 철수사례 중 투자유치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① 까르푸의 한국시장 철수 ② GM의 군산공장 폐쇄 ③ 미쉐린의 일본 오타공장 폐쇄 ④ GM홀덴의 호주사업 철수의 네 가지 사례를 살펴본다. 이런 사례조사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과정, 투자 전후 경영(재무)상황 변화, 철수배경, 철수 이후 현지국 반응 및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투자 철수 시 필요한 우리 정부의 적절한 정책대응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다국적기업을 포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3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중 철수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지속하는 기업과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 투자기업정보를 활용해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자국적·산업·지역별 현황을 살펴보고,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 활용해서 외국인 투자기업 중 철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성을 알아본다. 철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들의 총자산, 순이익(법인세차감전순이익), 노동자 수(상용노동자 수)를 우리나라에서 지속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비교한다.

제4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제활동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매출액과 국내기업의 고용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하는데, 특히 지역별로 같은 지역과 다른 지역에 있는 국내기업 그리고 전방산업(upstream industry)과 후방산업(downstream industry)의 국내기업들에 대한 효과를 구분해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국적기업의 철수에 대응하는 현재 우리의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다국적기업의 진입과 철수에 대응한 산업정책의 수립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고시킬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의 구조조정은 산업 간 노동과 자본의 신속하고 바람직한 재배치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철수 시 발생하는 사회문제 공동 대응 △외국인 직접투자 유인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현재 우리의 정책과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면서 향후 정책대응 방향을 제안한다.

제2장

K

다국적기업의 투자 철수사례

1. 까르푸(Carrefour)의 한국 철수
2.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3. 미쉐린(Michelin)의 일본 오타공장 폐쇄
4. GM홀덴(Holden) 호주 철수
5. 소결

외국인 직접투자는 투자유치국(host country)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준다는 이유로 각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현금 지원, 보조금 지급, 입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¹⁾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조세 지원, 현금 지원, 입지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²⁾

그러나 국내 일각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린 이후 경영상의 이유로 대안 없이 투자를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사례가 있어 외국인 투자 철수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³⁾ 예를 들어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12년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재매각함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린 외국인 투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상하이자동차는 2004년 쌍용자동차를 인수할 당시 고용 유지와 신차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철수함에 따라 기술유출을 위한 투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본 장에서는 다국적기업의 투자 철수사례 중 투자유치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투자 철수 시 필요한 우리 정부의 적절한 정책대응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례조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과정, 투자 전후 경영(재무)상황 변화, 철수배경, 철수 이후 현지국 반응 및 현재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례는 국내 과거와 최근 철수사례인 까르푸의 한국 철수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사례를 비롯하여,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서 철수가 이뤄진 미쉐린의 일본 오토공장 폐쇄와 GM홀덴의 호주 철수 등이다.

1)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주요국의 인센티브제도는 KOTRA(2017)에 잘 설명되어 있다.

2) 우리나라의 투자인센티브제도는 Invest Korea, “투자절차 및 인센티브,” <http://www.investkorea.org/kr/foreigner/invest.do>(검색일: 2019. 5. 16)를 참고하기 바라며,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3) 「‘철수’ 통보만 하고 떠나는 외국 기업들…한국진출 승인 때 고용 안전장치 만들라」(2014. 3. 18),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4/03/424569/>(검색일: 2019. 5. 2); 「‘떡튀’ 외국기업 근절한다…폐업 시 산업부장관 신고 의무화」(2017. 1. 3),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80>(검색일: 2019. 5. 2); 「[취재후] ‘떡튀’ 외국계 기업, 근로자는 ‘발동동’」(2016. 8. 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22230>(검색일: 2019. 5. 2).

한편 본 장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조사에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해고노동자들의 재취업 여부 및 기간 등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 내 경제적 피해 등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 축소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제4장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1. 까르푸(Carrefour)의 한국 철수

1996년 부천에 첫 매장을 개점한 프랑스 기업 까르푸는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실시한 기업이었다.⁴⁾ 그러나 백풍렬(2006)에 의하면 까르푸가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현지 파트너와의 마찰, 낮은 임금수준, 일방적인 노사 관리정책을 비롯하여 사회적 책임 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까르푸의 한국 철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까르푸의 한국 진출

이정희, 조영상, 김종진(2012)에 의하면 한국의 유통시장은 1989년 1단계 개방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방되었으며 1996년에는 점포 수 및 매장면적에 대한 제한이 철폐되는 등 전면적인 개방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전면 개방이 이뤄진 1996년 이후에는 까르푸, 월마트, 삼성테스코, 코스트코 등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가 한국에 진출하게 된다.

까르푸는 1993년 12월 재무부로부터 6천만 달러(약 480억 원)의 투자인가를

4) 까르푸의 대한민국 투자는 「[브랜드 흥망사] '까르푸' 기억하세요? 한국에서 실패한 글로벌 유통 공룡」(2018. 11. 26), <https://it.donga.com/28417>(검색일: 2019. 5. 10)에 의하면 1999년 9.3억 달러로, 산업자원부(2002. 9. 3)에 의하면 신고금액 기준 13.3억 달러로 차이가 하나 두 자료 모두에서 까르푸는 당시 최대 대한민국 투자기업으로 조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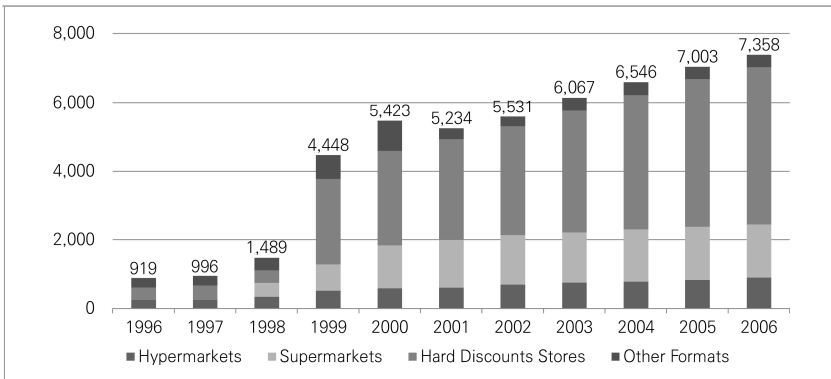
표 2-1. 우리나라의 유통시장 개방 단계

연도	구분	개방내용
1981	-	○ 단일품목 도소매업 허용
1989	1단계	○ 외국기업 국내지사 수입판매업증 확대 ○ 의약품 도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
1991	2단계	○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선별적 허용 - 매장면적 1천 m^2 미만, 점포 수 10개까지 허용
1993	3단계	○ 도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선별적 허용 - 네거티브 리스트 공표 - 매장면적 3천 m^2 미만, 점포 수 20개까지 허용
1996	전면개방	○ 점포 수 및 매장면적 제한 철폐 ○ 업종별로는 외국인 투자 개방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 - 백화점, 쇼핑센터에 대한 외국업체 직접 진출 금지 - 총포, 도검, 화약류 유통업, 골동품 및 예술품 유통업, 지방정부가 지정한 농수축산물 공급, 도매시장의 개설, 운영 및 그 안에서의 유통 서비스는 개방에서 제외 - 3천 m^2 이상의 도매시장과 대형 도매점 개설은 정부심사 필요
1998	외국인 투자촉진 정책	○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외국인 투자촉진정책 채택 - IMF 극복을 위한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정 - 백화점, 쇼핑센터의 경제성 평가 검토 삭제 - 외국인 토지소유 허용

자료: 이정희, 조영상, 김종진(2012), p. 7, [표 2-1].

그림 2-1. 까르푸의 전 세계 매장현황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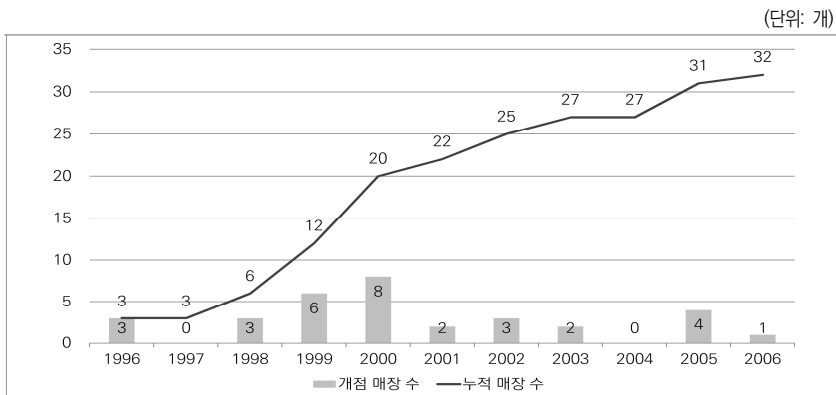


자료: Carrefour(2001), p. 92; Carrefour(2006), p. 13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받고 1994년 현지법인인 한국까르푸를 설립한 이후 1996년 7월 부천에 첫 매장인 중동점을 개점하였다.⁵⁾ 까르푸는 전 세계적으로 하이퍼마켓(Hypermarket), 슈퍼마켓(Supermarket), 소형 할인점(HDS: Hard Discount Store), 편의점 등 기타(Other Formats) 유형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 내 매장은 모두 하이퍼마켓의 형태로 진출하였다.⁶⁾

까르푸가 한국에 처음 진출한 1996년에 일산과 대전(둔산점)에 2호점과 3호점을 개점하였으며, 이후 2006년까지 총 32개의 매장을 개점하였다. 까르푸가 소형 할인점을 중심으로 전 세계 매장을 확대하기 시작한 1999년에 한국 내 매장 역시 6개가 신규로 개점되었으며, 이듬해인 2000년에도 8개의 매장을 신규로 개점하는 등 한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해가는 기간에 까르푸의 진출이 가장 활발하였다.

그림 2-2. 까르푸의 한국 내 매장현황



자료: Carrefour(2001), p. 92; Carrefour(2006), p. 1317; 「까르푸, 32호 병점점 개점」(2006. 1. 2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59686579719688&mediaCodeNo=257>(검색일: 2019. 7. 8)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5) 박 군(2016), p. 26 및 약 랑(2012), p. 66 참고. 박 군(2016), p. 26에서는 첫 매장 개점연도가 1997년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Carrefour(2001), p. 92에 의하면 한국 내 매장은 1996년에 3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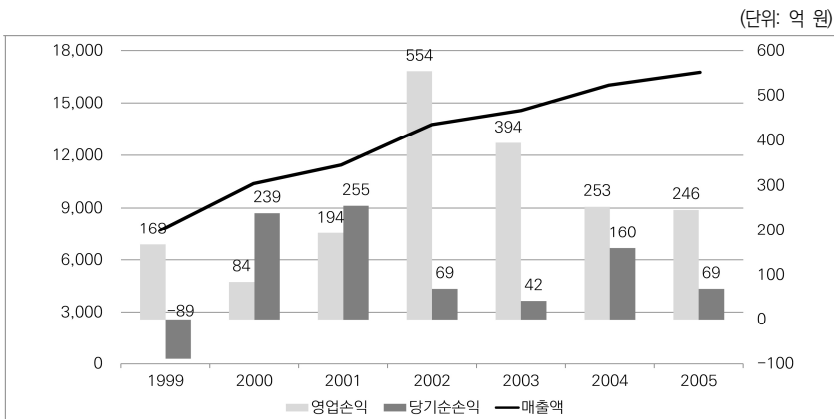
6) 하이퍼마켓은 슈퍼마켓, 대형 할인점, 백화점의 형태가 결합된 대규모 소매 점포를 말한다(위키백과, 「하이퍼마켓」, <https://ko.wikipedia.org/wiki/%ED%95%98%EC%9D%B4%ED%8D%BC%EB%A7%88%EC%BC%93>(검색일: 2019. 7. 5).

7) 까르푸가 2006년에 한국에서 철수함에 따라 Carrefour(2006), p. 131에는 2006년 한국 매장 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나. 진출 이후 까르푸의 재무현황

까르푸의 매출은 한국 진출 이후 1999년 7,858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1조 6,043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1999년 168억 원에서 2002년 554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5년에는 오히려 246억 원으로 감소한다. 당기순손익은 1999년 89억 원 순손실에서 2000년과 2001년에는 각각 239억 원과 255억 원의 순이익으로 전환되었으나 이후 2004년을 제외하고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즉 매출액을 제외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까르푸가 철수하는 2006년에 가까워질수록 악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3. 까르푸의 재무현황



주: 매출액은 왼쪽, 영업이익 및 당기순손익은 오른쪽임.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플러스스토어즈 감사보고서(1999~2005)," [http://dart.fss.or.kr/dsab001/main.do?autoSearch=true#\(검색일: 2019. 7. 8\)](http://dart.fss.or.kr/dsab001/main.do?autoSearch=true#(검색일: 2019. 7. 8))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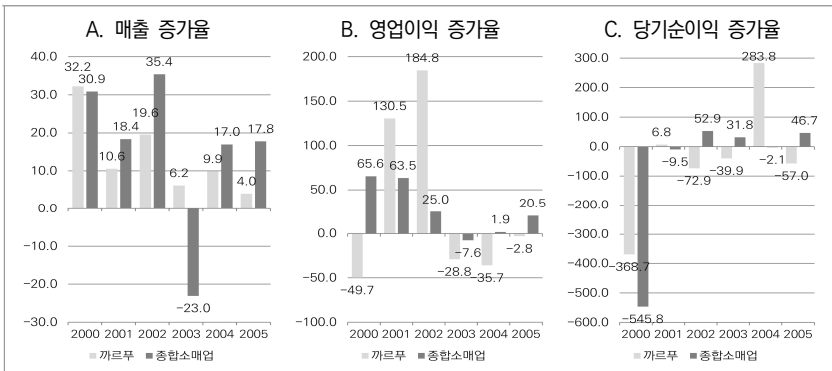
2006년에 가까워질수록 악화되는 까르푸의 재무현황이 까르푸의 문제인지 국내 종합소매업 전반적인 문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까르푸와 까르푸가 포함되어 있는 종합소매업에 대한 현황을 비교하였다. 2000~05년에 대한 매출 증

가을, 영업이익의 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2000년대 초반까지는 까르푸의 재무현황이 더 양호하였으나 까르푸가 철수하는 2006년에 가까워질수록 까르푸의 재무현황이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까르푸 및 종합소매업에 대한 매출 증가율은 2000~02년보다 2003~05년에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00년과 2003년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서 종합소매업의 매출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영업이익의 증가율 역시 2000~02년보다 2003~05년에서 전반적으로 낮으며, 2000~02년 중에는 까르푸가, 2003~05년 중에는 종합소매업의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은 변동이 큰 가운데 2002~06년 중에는 2004년을 제외하고 종합소매업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까르푸와 종합소매업 모두에서 2000년 당기순이익이 매우 크게 하락한 것으로 계산되었는데 이는 1999년에 까르푸는 89억 원, 종합소매업은 1,596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이후 2000년에 각각 239억 원과 7,117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으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율이 음(-)으로 크게 계산되었다.

그림 2-4. 까르푸와 종합소매업의 재무현황 비교(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단위: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플러스스토어즈 감사보고서(1999~2005)," [http://dart.fss.or.kr/dsab001/main.do?autoSearch=true#\(검색일: 2019. 7. 8\)](http://dart.fss.or.kr/dsab001/main.do?autoSearch=true#(검색일: 2019. 7. 8);); 통계청, "기업경영분석,"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검색일: 2019. 7. 8\)](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검색일: 2019. 7. 8))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까르푸의 한국사업 철수 배경

한국까르푸⁸⁾에 의하면 까르푸는 1993년 6천만 달러에 대한 투자인가를 받은 이후 2004년까지 총 1조 6천억 원을 한국에 투자하였으며, 2005년 중에도 신규 매장 개점에 약 1,900억 원, 기존 매장 리모델링에 약 600억 원을 투자할 것을 계획하는 등 한국에 꾸준한 투자를 실행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로 인해 까르푸는 2002년 외국인 투자유치유공자 포상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으며,⁹⁾ 2003년 말 기준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실시한 기업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¹⁰⁾

그러나 2003년 6월 부산 사상점을 이마트에 매각하였으며, 2004년에는 롯데마트 등에 인수합병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¹¹⁾ 2004년 한국까르푸의 매각설은 본사가 해외법인의 현지 시장점유율이 상위 3위 내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 철수를 검토한다는 영업방침이 발표되고 일본과 멕시코에서 철수함에 따라 부각되었다.¹²⁾ 당시 까르푸의 한국 내 시장점유율은 8% 수준으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에 이어 업계 4위였으며, 그나마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2-2. 매출액 기준 한국 내 주요 할인점의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할인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이마트	24.9	26.8	27.7	28.7	29.9
홈플러스	9.1	12.3	15.0	16.2	19.5
롯데마트	9.2	10.9	10.5	11.2	12.0
한국까르푸	8.3	7.9	7.5	7.5	8.5

자료: 하상민(2006), p. 3, [표 1].

8) 한국까르푸(2005), p. 4.

9) 산업자원부(2001), p. 1, p. 6, p. 13.

10) 「외국계 할인점 “한국 벽 높네”」(2005. 1. 18), <https://www.mk.co.kr/news/home/view/2005/01/22450/>(검색일: 2019. 7. 9).

11) 「“한국적 유통” 못 따라잡아서」(2006. 3. 22),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0408.html(검색일: 2019. 7. 8).

12) 하상민(2006), p. 3.

까르푸는 2006년 1월 수원(병점점)에 32호 매장을 개점하면서 그동안 부각되었던 매각설을 부인하였으나¹³⁾ 3월 매각을 공식화하고 인수희망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각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4월 28일 이랜드그룹(이랜드리테일, 홈에버)을 인수자로 공식 발표하였다.¹⁴⁾ 한편 공정거래위원회¹⁵⁾에 의하면 이랜드리테일 및 케이디에프유통은 한국까르푸의 주식을 각각 50%씩 취득(총 15억 유로)하였으며, 기업결합에 따라 경기 안양·군포·의왕·과천 지역, 경기 성남·용인 지역, 전남 순천 지역 내 각 1개 지점(총 3개 지점)을 매도해야 했다.

라. 한국의 반응과 현재 상황

까르푸가 이랜드그룹에 매각된 이후 한국 내에서는 두 가지 사회문제가 논의되었다. 하나는 까르푸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고용승계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매각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문제이다.

고용승계 문제의 경우 남옥진¹⁶⁾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이랜드그룹이 100% 고용승계, 임차매장 및 거래업체 승계, 임직원 급여 유지 등 민감한 문제를 모두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최종 계약자로 결정된 점을 감안하면 순조롭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까르푸 노조는 매각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6년 3월 31일 까르푸와 18개월이 경과한 계약직 직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¹⁷⁾ 그러나 인수기업인 이랜드는 2007년 5월 계약만료를 이유로 15명을 계약해지하였으며, 2007년 들어 6월까지 400여 명이 직장을 떠난 것으로 보도되었다.¹⁸⁾ 한편

13) 「까르푸의 대한민국 탈출 작전」(2006. 4. 12),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1100/2006/04/021011000200604120605012.html>(검색일: 2019. 7. 11).

14) 백종렬(2006), p. 3.

15) 공정거래위원회(2006), pp. 2~4.

16) 남옥진(2006), p. 1.

17) 「서울지방노동위 '이랜드 사측에 철회」(2007. 7. 25), <http://work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151>(검색일: 2019. 7. 11).

18) 남옥진(2006), p. 1.

서울지방법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이랜드 측에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을 명령하였으나 복직 역시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¹⁹⁾

양도소득세 납부문제는 2014년에 최종결론났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지방법원(2011)에 의하면, 한국까르푸의 지분은 프랑스에 본점을 둔 까르푸에스에이(CSA: Carrefour S.A.)와 네덜란드에 본점을 둔 까르푸네덜란드비브이(CNBV: Carrefour Nederland B.V.)가 각각 20.56%와 79.44%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CSA는 까르푸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314억 원을 납부하였으나 CNBV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을 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비과세·면제신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CNBV는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한 도관회사(Conduit Company) 이고 CSA가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결론 내리고 주식양수법인인 이랜드유통과 케이디에프유통에게 총 956억 원의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까르푸의 최종 인수자인 홈플러스테스코는 대전지방법원에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2014년에 대법원에서도 승소하여 최종적으로 세금납부 부과처분취소가 결정되었다.²⁰⁾

즉 까르푸는 매각 발표 이후 노조와 고용안정에 대한 단체협약을 갱신하고, 인수대상기업 선정 시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²¹⁾ 철수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고용문제에 대해 충분히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법원(2014)의 최종판결에서와 같이 까르푸는 한프랑스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CSA가 가진 한국까르푸의 지분 20.56%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CNBV가 가진 한국까르푸의 지분 79.44%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면제를 받아 우리의 조세규정 역시 준수하고 철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19) 「'믿음' 저버린 이랜드...까르푸와 '고용승계' 약속 불이행」(2007. 7. 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707111846411(검색일: 2019. 7. 11).

20) 대전지방법원(2011); 대법원(2014).

21) 「서울지방법노동위 '이랜드 사측에 철퇴」(2007. 7. 25),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151>(검색일: 2019. 7. 11).

2.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한국GM은 2016년 기준 3천여 개의 협력업체와 15.6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의 3위 자동차 회사였다.²²⁾ 그러나 2013년 이후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²³⁾ 2018년 2월에는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게 된다. 당시 군산공장에는 1,800여 명의 근로자가 있었으며, 2017년 7월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중단됨에 따라 대량해고와 지역경제 악화 등의 문제가 군산지역에 발생한 바²⁴⁾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GM의 대우자동차 인수과정²⁵⁾

과도한 확장과 차입경영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오던 대우그룹이 한국의 외환 위기 기간인 1999년 8월 해체되면서 대우자동차 역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를 따르게 된다.

당시 GM은 미국시장 내 점유율이 포드에 의해 추격당하고 있었으며, 한국 자동차 시장 규모와 대우자동차가 가지고 있던 세계 여러 지역거점에 매력을 느끼고 있어 대우자동차를 일괄 인수하기로 계획하고 1999년 12월 한국정부 및 채권단에 공식인수를 제안하게 된다.

실제 1990년대 미국시장 내 1위 자동차기업인 GM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1990년 35.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0년에는 7.2%p 하락한 28.0%로 감소한 것과 달리 포드 및 크라이슬러(FCA)의 점유율은 2000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보였다. 포드의 점유율은 1990년 23.8%에서 1993년 25.4%로 증가한 이후 1998년까지 25%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크라이슬러의

22) 기획재정부(2018), 별첨 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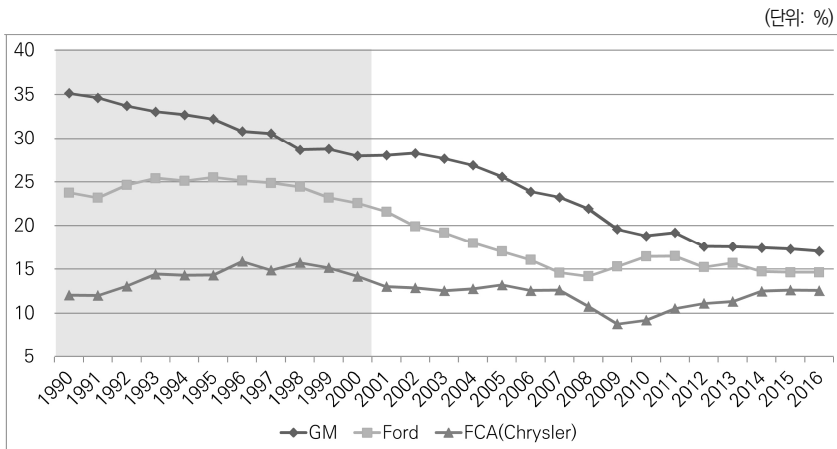
23) 위의 자료, 별첨 p. 1.

24) 산업통상자원부(2018a), pp. 1~2.

25) GM의 대우자동차 인수과정은 제갈정웅, 최도성, 박수근(2008), pp. 364~404를 이용하여 정리한다.

점유율은 1990년 12.0%에서 1996년 15.9%로 증가한 이후 2000년까지 15%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림 2-5. 미국시장 내 주요 3개 사의 점유율 추이



자료: knoema, "Top Vehicle Manufacturers in the US Market, 1961-2016." <https://knoema.com/floslle/top-vehicle-manufacturers-in-the-us-market-1961-2016>(검색일: 2019. 7. 17).

그리고 한국자동차 시장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연간 160만 대 정도가 판매되는 큰 시장이었다. 물론 외환위기 기간인 1998년의 판매대수는 78만 대로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회복하여 2002년에는 다시 162만 대가 판매되었다. 이러한 한국시장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시장이었으며,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규모가 큰 시장이었다.²⁶⁾ 더불어 한국은 자동차 산업과 함께 부품산업

표 2-3. 한국시장 내 자동차 내수현황

(단위: 천 대)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내수	1,104	1,268	1,436	1,556	1,556	1,644	1,513	780	1,273	1,430	1,451	1,622	1,318	1,094	1,143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주요통계," <http://www.kama.or.kr/CarDBController>(검색일: 2019. 7. 17).

수준 역시 높았으며 향후 중국으로의 진출이 용이하다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우자동차는 세계경영을 추진함에 따라 동유럽을 포함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 판매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GM의 주력차종인 중대형 차량 이외 소형차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²⁷⁾ 즉 GM은 대우자동차 인수가 한국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세계시장으로의 진출 확대에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우자동차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GM은 2년여 간의 협상과정을 거치며 2002년 4월 채권단과 대우자동차 인수에 합의한다. 인수하기로 합의한 사업장은 군산승용사업장, 창원사업장 일체, 해외생산법인(베트남), 9개 해외판매법인으로²⁸⁾ 일괄 인수하기로 한 인수계획과 차이가 있다. 이외 부평공장은 ① 6개월 연속하여 2교대로 완전 가동되고 ② 매출증가율이 3년 연속하여 4%를 초과하고 ③ GM이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④ GM의 연평균 손실시간 이하로 파업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6년 이내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²⁹⁾ 2005년 10월에 인수한다.

한편 GM은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7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100% 감면 및 이후 3년간 50% 감면 혜택과 더불어 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 100% 감면 및 이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³⁰⁾

나. 인수 이후 한국GM의 재무현황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

26) 「대우차 매각 GM의 대우차 인수배경과 향후 전략」(2002. 4. 30),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02043051128>(검색일: 2019. 7. 17).

27) 제갈정용, 최도성, 광수근(2008), pp. 369~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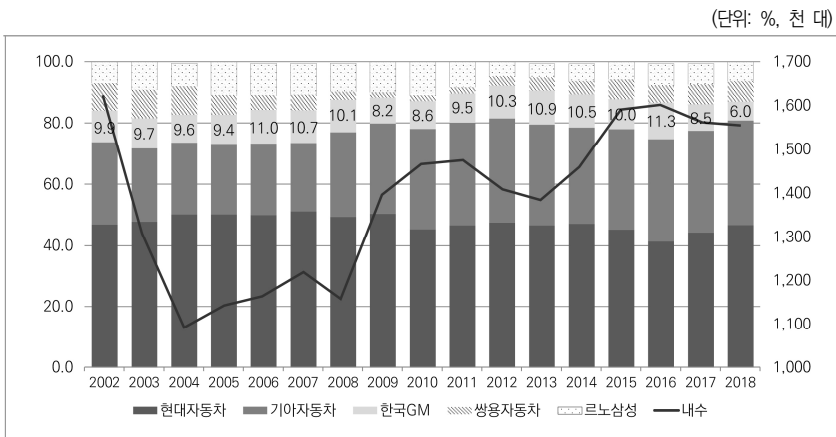
28) 위의 자료, pp. 390~392; 한국자동차공업협회(2002), pp. 3~4.

29) 위의 자료, p. 391; 한국자동차공업협회(2002), p. 4.

30) 위의 자료, p. 391.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한국시장에서 한국GM은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중반까지 10% 수준에서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한국GM의 한국 내 점유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인 2009~10년에 8%대로 하락한 이후 회복하여 2016년에는 11.3%까지 상승한다. 그러나 한국GM의 시장점유율은 2017년에 8.5%, 2018년에 6.0%로 2017년부터 다시 하락한다.

그림 2-6. 한국 주요 완성차 기업의 한국 내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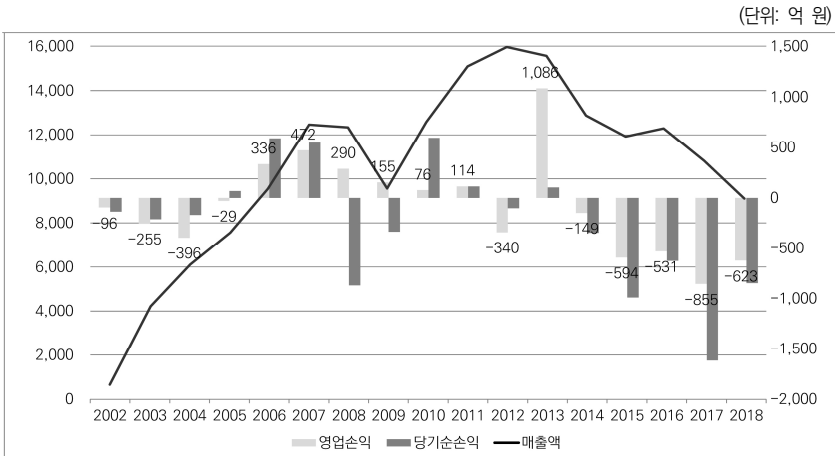
주: 수입차를 제외한 시장점유율이며, 시장점유율은 왼쪽, 내수현황은 오른쪽임.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주요통계," <http://www.kama.or.kr/CarDBController>(검색일: 2019. 7. 17).

한국GM의 시장점유율이 장기간 10% 수준에서 안정적이었던 것과 달리 재무상황은 크게 변동하는 추이를 보였다. 인수 이후 매출액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이를,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은 손실에서 이익으로 전환되는 추이를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난 후 2013년을 기점으로 다시 빠르게 악화하기 시작한다. 2012년 1조 5,950억 원이던 매출액은 2018년 9,167억 원으로 약 40% 감소하였으며, 2017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855억 원과 1,626억 원으로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다. 이 시기에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현대 및 기

아자동차에서도 나타난 현상이기는 하였으나 이 두 기업은 여전히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었다.

그림 2-7. 한국GM의 재무현황



주: 매출액은 왼쪽,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은 오른쪽임.

자료: KISVALUE, <https://www.kisvalue.com/web/index.jsp>(검색일: 2019. 7. 22)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4. 현대 및 기아자동차의 영업이익

(단위: 억 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현대	3,227	4,684	4,305	3,721	3,735	4,267	2,699	2,163	-59
기아	1,680	1,911	1,645	1,482	1,435	2,295	1,947	603	393

자료: KISVALUE, <https://www.kisvalue.com/web/index.jsp>(검색일: 2019. 7. 22)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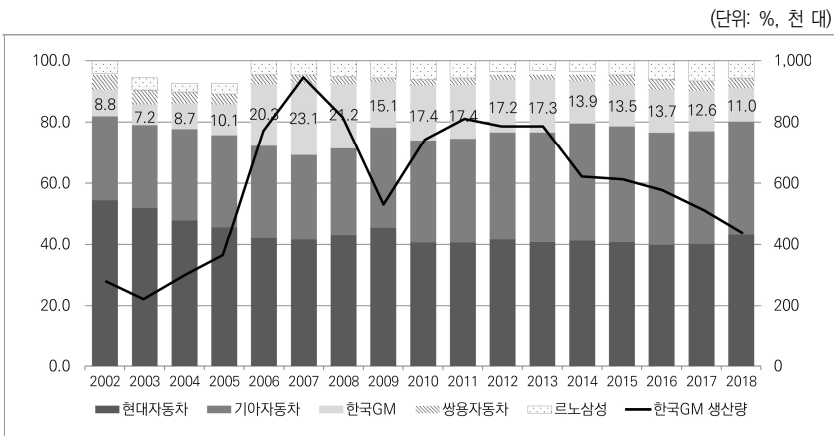
다. GM의 한국사업 축소 배경

한국GM의 생산대수는 피인수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07년 94만 대까지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에 53만 대로 급격히 감소한다. 이후 80만 대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하나 2013년을 기점으로 하락 추이로 전환

된다. 2013년은 한국GM의 재무현황이 악화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2013년이 한국GM에게 있어 큰 변화의 시기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2013년에 한국GM의 경영실적이 악화된 것은 GM 본사의 경영전략이 기존 판매량 중심에서 수익성 중심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이다.³¹⁾ GM 본사는 2009년 파산보호를 신청할 정도로 매우 어려웠으며, 이후 대대적인 글로벌 생산 및 판매시설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정홍준 외³²⁾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GM이 한국GM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시장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2013년에 철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GM의 생산대수는 이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8. 한국 주요 완성차 기업의 생산비중 및 한국GM 생산량



주: 생산비중은 한국 총 생산대수에서 각 완성차 기업의 생산대수가 차지하는 비중이며, 생산비중은 왼쪽, 생산량은 오른쪽임.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주요통계," <http://www.kama.or.kr/CarDBController>(검색일: 2019. 7. 17).

2010년대 초반 유럽으로 약 20만 대의 승용차를 수출하던 한국GM의 수출은 2013년 8만 8,977대, 2014년 1만 4,145대로 급격히 하락한 이후 2010년

31) GM의 경영전략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홍준 외(2018), pp. 14~19와 황현일(2018), pp. 13~17을 참고하기 바란다.
 32) 정홍준 외(2018), p. 22.

대 후반에는 5만 대 수준으로 회복한다. 한국GM의 전 세계 승용차 수출 역시 이와 유사하게 2010년대 초반 50만 대 수준에서 후반에는 10만 대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다. 이와 달리 SUV의 전 세계 수출은 미국을 중심으로 2013년 이후 25만 대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 이 역시 GM 본사의 수익성 중심의 경영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GM 본사는 고급차(캐딜락), SUV와 픽업트럭, 전기차, 중국시장에 집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한국GM은 2010년에 전 세계로 승용차를 SUV보다 6.77배 더 많이 수출하였으나 2018년에는 전 세계로 SUV를 승용차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수출하였다.

표 2-5. 한국GM의 주요 지역별 수출현황

(단위: 대, %)

연도	승용차					SUV					승용차 SUV
	유럽		북미		전 세계	유럽		북미		전 세계	
	대수	비중	대수	비중		대수	비중	대수	비중		
2010	203,486	38.4	84,551	16.0	529,642	30,295	38.7	6	0.0	78,202	6.77
2011	225,170	43.3	71,084	13.7	519,501	37,008	38.8	0	0.0	95,485	5.44
2012	200,820	41.7	87,878	18.3	481,100	87,968	64.0	6,231	4.5	137,366	3.50
2013	88,977	27.0	96,158	29.2	329,373	174,781	63.7	53,391	19.4	274,591	1.20
2014	14,145	7.1	102,413	51.4	199,374	160,381	60.1	68,646	25.7	266,977	0.75
2015	56,170	27.2	92,768	44.9	206,521	94,752	37.5	121,337	48.1	252,491	0.82
2016	48,739	32.7	55,564	37.2	149,194	91,158	34.4	132,267	49.8	265,369	0.56
2017	49,605	43.0	34,980	30.3	115,394	116,085	42.1	125,512	45.5	275,868	0.42
2018	52,784	43.6	42,957	35.4	121,192	79,167	31.9	151,434	61.1	247,862	0.49

주: 비중은 차종별 전 세계 수출에서 지역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주요통계," <http://www.kama.or.kr/CarDBController>(검색일: 2019. 7. 17).

특히 크루즈와 올란도 등 쉐보레 차종을 생산하던 군산공장의 생산량은 2013년 15만 대에서 유럽으로의 수출이 불가능해진 이후 2017년 3만 대로 약 80% 감소하였다. 군산공장의 가동률 역시 다른 사업장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

은 수준이었으며 2016년에는 18.1%로 20% 이하로 하락하게 되었다. GM은 이를 계기로 2018년 2월 군산공장을 폐쇄하기로 하였다.

표 2-6. 한국GM의 공장별 생산량 및 가동률

(단위: 만 대,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생산량	부평	38	36	32	34	34
	창원	25	19	22	21	15
	군산	15	8	7	4	3
	합계	78	63	61	59	52
가동률	부평 1공장	98.9	112.1	108.5	112.4	-
	부평 2공장	67.9	58.7	51.7	61.4	-
	창원	110.4	91.6	107.9	97.9	-
	군산	54.9	34.6	29.7	18.1	-
	전체	83.5	75.2	76.4	76.5	-

주: 부평공장에서는 소형차 아베오, 소형 SUV 트랙스, 중형차 말리부, 중형 SUV 캡타바, 준대형차 알파오(단종)를, 창원공장에서는 경차 스파크, 경상용차 다마스 및 라보를, 군산공장에서는 준중형차 크루즈, MPV(다목적 차량) 올란도를 생산함. 자료: 정흥준 외(2018), p. 23, p. 80; 「한국GM 창원공장도 '위기'…생산차종 판매량 4년 새 40% '뚝」(2018. 3. 5), <https://www.yna.co.kr/view/AKR20180304042600003>(검색일: 2019. 7. 24).

라. 한국의 반응과 현재 상황

GM은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함과 동시에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통해 한국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와 산업은행이 한국GM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여 한국GM의 부실원인이 판매부진과 인건비 등 고비용 구조가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³³⁾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GM의 부실원인이 본사의 과도한 R&D비용 부과, 막대한 본사 차입금과 고금리, 본사와 한국GM 간의 이전가격 문제, 쉐보레 유럽 및 러시아 철수비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본사업 무추진비 전가 등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³⁴⁾

33) 기획재정부(2018), p. 3에 따르면 GM 본사와의 거래를 위한 이전가격은 다른 계열사와 유사하며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하였다.

34) 한국GM 부실원인에 대한 의혹은 오민규(2018); 김동한(2018); 「한국GM 실사보고서 “부실원인 GM

기획재정부³⁵⁾에 의하면, 최종 실사결과 GM이 제시한 신차 배정, 투자계획, 인건비를 포함한 고정비용 감축 노력 등이 진행될 경우 한국GM의 경영회생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2018년 5월 한국GM 관련 정부·산업은행·GM 간의 협상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GM은 한국GM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본사 대출금 28억 달러를 출자전환하기로 하였으며, 설비투자 등에 28억 달러를 지원하고 R&D 및 디자인센터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생산성 향상

표 2-7. 산업은행 및 GM 간 협의내용

구분	GM	산업은행	정부
재무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대출금 28억 달러 출자 전환 		
생산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투자: 20억 달러 ◦ 운영자금: 8억 달러 ◦ R&D 및 디자인센터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투자: 7.5억 달러 	
수익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 있는 신차 2종 배정 ◦ 인건비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퇴직금 등 8억 달러 ◦ 대출금리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8~5.3% → 콜금리 + 200bp (2018년 5월: 3.48%) ◦ 생산비용 절감 노력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M의 지분매각 10년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5년: 매각 제한 - 이후 5년: 35% 이상 1대 주주 유지 ◦ 비토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비토권 유지 - 2017년 10월 만료 비토권 회복 ◦ 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자료 제공 - 주주감사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투지역 지정 등 현행법 내에서 지원 검토

자료: 기획재정부(2018), 별첨 pp. 2-6을 이용하여 저자 정리.

과 불공정거래 규명 쉽지 않아"... "판매량 회복이 관건" (2018. 4. 2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9/2018042900417.html(검색일: 2019. 8. 8)를 참고하기 바란다.
35) 기획재정부(2018), 별첨 p. 3.

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력 있는 신차를 배정하기로 하고 원가구조 개선을 위해 희망퇴직금 등에 8억 달러를 지원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기로 하는 등 총 64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2018)가 발표한 협상결과에 의하면 산업은행은 대주주 역할,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 지속가능한 경영회생 방안 마련 등 3대 원칙에 따라 한국GM의 경영회생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시설투자를 위해 7.5억 달러를 출자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법적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국GM은 정리해고 방식의 구조조정 이전인 2018년 2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약 총 3천여 명(생산직 2,600명, 사무직 40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함에 따라 감원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전해진다.³⁶⁾ 군산공장 근로자 1,800명 중 1천여 명이 이때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³⁷⁾ 현재 군산공장 잔류인원 600명 중 200명은 다른 공장으로 전환배치되어 근로하고 있으며 400명은 무급휴직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부평공장의 1교대제로의 전환, R&D 및 디자인센터의 법인 분리, 정비부문 외주화, 부평 엔진공장 물량 감소 등 여전히 한국GM은 저장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³⁸⁾ 즉 부평공장의 1교대제로의 전환은 부평공장 역시 군산공장과 같이 폐쇄될 수 있다는 불안의 확대, R&D 및 디자인센터의 법인 분리로 생산공장에 대한 청산 가능 우려 확대, 정비부문 외주화에 따른 희망퇴직 확대, 부평 엔진공장에 대한 구조조정 등 한국GM에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는 국내 노동시장에 장기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8년 군산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근로자·실직자 지원, 지역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지역상권 및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등이 지원대책으로 발표되

36) 정홍준 외(2018), p. 43.

37) 동일한 보고서인 정홍준 외(2018), p. 43와 정홍준 외(2018), p. 123의 군산공장 내 희망퇴직자 수치가 차이 난다.

38) 한국GM의 저장도 구조조정 내용은 정홍준 외(2018), pp. 50~56에 잘 설명되어 있다.

었다.³⁹⁾ 그리고 2019년 3월에는 1차 부품업체인 엠에스오토텍이 계열사인 (주) 명신을 통해 군산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로 공시하였으며, 매각은 6월에 완료되었다.⁴⁰⁾ (주)명신은 인수한 군산공장에서 주문자 위탁생산(OEM) 형태로 2021년부터 전기차 5만 대를 생산하고, 향후 2022년부터는 생산차종을 3개로 늘리며, 2025년까지 자체 모델을 개발하여 연간 15만 대의 전기차 생산체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⁴¹⁾ 이러한 일련의 지원 및 투자는 군산지역의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3. 미쉐린(Michelin)의 일본 오타공장 폐쇄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경제규모에 비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많지 않은 국가 중 하나이다.⁴²⁾ 특히 일본의 경기침체 장기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만성적 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2009년을 전후하여 다수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일본에서 신흥국으로 투자처를 이전한 바 있다.⁴³⁾ 이에 이 시기에 발생한 철수사례 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미쉐린의 일본 철수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39) 산업통상자원부(2018a).

40) 김호섭, 송민준(2019), p. 1.

41) 「한국GM 군산공장 28일 매각 완료」(2019. 6. 25),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6/452842/>(검색일: 2019. 9. 16).

42) 한국과 일본의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은 2017년 현재 각각 14.99%와 4.27%로 전 세계 및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

(단위: %)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7.79	11.68	11.44	10.86	9.45	13.52	12.38	11.24	12.91	13.85	12.71	12.98	13.38	14.99
일본	1.03	2.12	2.38	2.94	4.04	3.83	3.77	3.67	3.32	3.31	3.54	3.98	3.86	4.27
G20	20.91	22.37	25.32	28.26	21.77	27.51	27.59	25.51	26.99	28.55	28.13	29.57	31.54	34.14
OECD	21.83	23.80	27.42	30.90	24.26	30.53	30.87	29.50	31.70	34.11	33.99	36.23	38.03	41.91
전 세계	22.45	24.06	27.38	30.96	24.23	30.37	30.75	28.64	30.54	32.17	32.19	34.40	36.61	39.24

자료: UNCTADSTAT, "Data center," <https://unctadstat.unctad.org/wds/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검색일: 2019. 5. 20).

43) KOTRA(2010), p. 1, p. 8.

가. 미쉐린의 일본 진출⁴⁴⁾

미쉐린은 1964년 도쿄 하네다 공항과 하마마츠쵸 간 모노레일에 스틸래디얼 X 타이어 판매를 시작으로 일본에 진출하였다. 이후 1975년에 일본 미쉐린 타이어주식회사(日本ミシュランタイヤ株式會社)를 설립하고 일본시장에서 입지를 높여갔다. 미쉐린은 1991년에 일본과 아시아 시장을 위한 타이어 R&D 센터인 미쉐린 리서치 아시아를 설립하였으나 2011년에 일본 미쉐린타이어가 이를 합병하였다. 일본 미쉐린타이어는 현재 일본 내에서 타이어 판매(승용차, 이륜차, 트럭 및 버스, 광산·건설기계·산업용 농기계, 항공기)와 R&D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은 하지 않고 있다.

일본 군마현에 위치한 미쉐린타이어의 오타공장은 1989년에 설립되었다. 1964년부터 고무제품을 군마공장에서 생산하던 일본 이화학연구소(현 오카모토주식회사)와 일본 미쉐린타이어가 1989년 합작을 통해 승용차용 타이어를 생산하는 오타공장을 설립하였다. 이후 합작기업은 2000년에 미쉐린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변경되었고, 이 자회사는 2013년에 일본 미쉐린타이어에 의해 합병되며, 오타공장은 2010년 7월 상업용 타이어 생산을 중지하고 폐쇄하기로 결정되었다.

나. 오타공장 폐쇄 전후 일본 타이어 산업현황⁴⁵⁾

신흥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자동차 대중화와 선진국의 고기능 타이어 수요 확대 등으로 고성장⁴⁶⁾을 이어오던 일본 타이어 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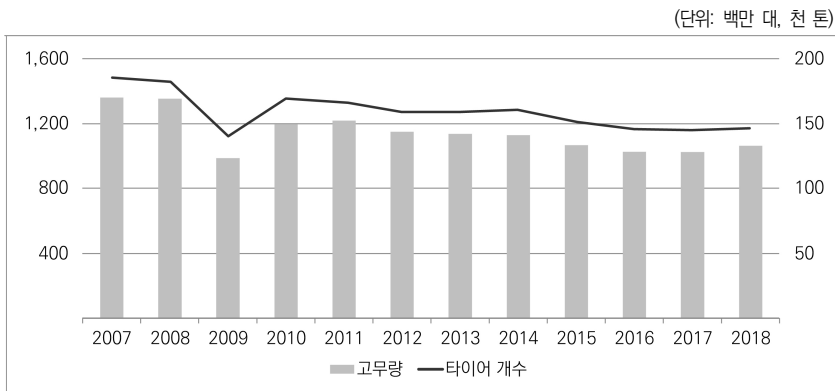
44) 미쉐린의 일본 진출 관련 내용은 日本ミシュランタイヤ株式會社 홈페이지(<https://www.michelin.co.jp/auto/company>, 검색일: 2019. 9. 17)와 日本ミシュランタイヤ株式會社(2010, 2011)의 내용을 이용하여 정리한다.

45) 일본 미쉐린타이어는 비상장기업으로 재무자료를 구할 수 없어 일본 타이어 산업현황을 통해 당시 상황을 평가하도록 한다.

46) 한일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2013), p. 5.

부진에 빠지게 된다. 실제 2009년 일본 내 타이어 생산량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년동기(1억 8,266만 개)대비 22.7% 감소한 1억 4,114만 개로 급격히 감소한다. 이듬해인 2010년에는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2016년 이후부터는 1억 5천만 개를 하회하는 등 소폭이기는 하나 감소 추이를 보이며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2-9. 일본 내 타이어 생산 개수 및 고무사용량 추이



주: 1) 2007년 값은 2008년 값과 전년 대비 비중을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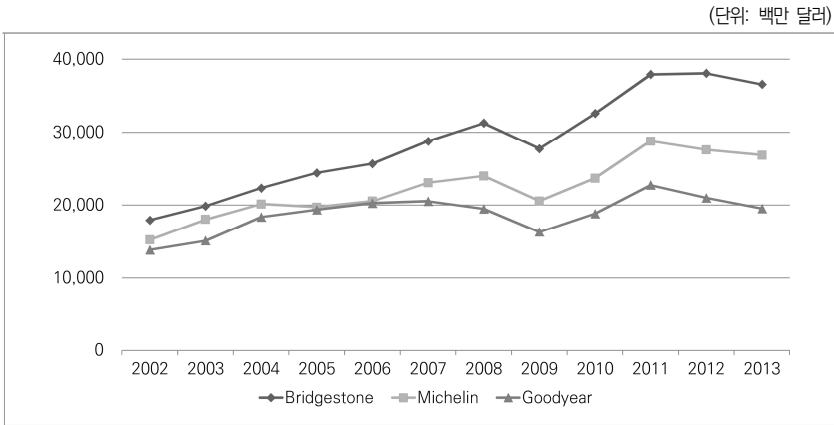
2) 고무량은 왼쪽, 타이어 개수는 오른쪽임.

자료: JATMA(2018, 2019)의 Time-series Statistical Tables.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내 타이어 생산기업이 가지는 어려움은 일본에서만 나타난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세계 3대 타이어 생산기업의 매출액은 200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09년에 급감하는 양상을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까지 회복하는 추이를 보이던 각 기업의 매출액은 이후 감소세로 다시 반전되었다. 일본 미쉐린타이어는 2009년 생산 감소를 경험한 이후 2010년 1월 오타공장에 대한 가동을 7월부터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한다.⁴⁷⁾

47) 日本ミシュランタイヤ株式会社(2010).

그림 2-10. 세계 3대 타이어 생산기업의 매출액 추이



자료: Bridgestone, "Bridgestone Data," https://www.bridgestone.com/corporate/library/data_book/index.html (검색일: 2019. 9. 18).

다. 오타공장 폐쇄 배경

일본 미쉐린타이어⁴⁸⁾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오타공장은 2006년부터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용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2007년부터는 고기술제품을 생산하는 데 집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타공장의 생산비용은 세계 다른 공장에 비해 2배가량 높았다.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오타공장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KOTRA⁴⁹⁾ 역시 미쉐린의 오타공장 폐쇄 결정이유를 고비용 구조와 금융위기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쉐린은 비용이 저렴한 인도로 공장이전을 결정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2010년 당시 미쉐린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 내 타이어 제조업체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일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⁵⁰⁾에 의하면 브리지스톤과 스미토모고무공업 역시 2010년을 전후하여 일본 내 타이어시장

48) 日本ミシュランタイヤ株式会社(2010).

49) KOTRA(2010), p. 3.

50) 한일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2013), p. 4.

이 향후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브리지스톤은 2009년 7월 18개 판매회사를 5개로 통합하고 2012년까지 2개로 통합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스미토모고무공업 역시 2010년 22개 판매대리점을 11개로 단계적으로 통합하였다.

라. 일본의 반응과 현재 상황

일본 미쉐린타이어⁵¹⁾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오타공장 폐쇄 발표 당시 공장 내 직원은 약 380명 정도였으며, 폐쇄되는 오타공장 직원에 대한 미쉐린타이어로의 업무 재배치 및 오타지역 내외로의 이직 등을 위한 지원대책을 직원대표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에 의하면 미쉐린은 오타공장 폐쇄와 더불어 프랑스 및 북미의 생산·판매 재편과 프랑스의 조기퇴직을 포함하여 약 4억 1천만 유로를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미쉐린은 동 보도자료를 통해 오타공장의 생산을 아시아·유럽·북미 등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미쉐린은 2007년부터 구조조정에 착수하여 중국 선양에는 약 120억 개의 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인도 남부에는 767억 엔을 투입하여 버스 및 트럭용 타이어 공장을 세울 계획을 하였다.⁵²⁾

현재 일본 미쉐린타이어는 오타공장 부지에 연구개발, 콜센터, 정보시스템, 물류 등 관리부서를 운영하고 있다.⁵³⁾

51) 日本ミシュランタイヤ株式会社(2010).

52) 「굿바이 재팬」(2010. 3. 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11/2010031100076.html(검색일: 2019. 9. 16).

53) 日本ミシュランタイヤ株式会社(2011).

4. GM홀덴(Holden) 호주 철수

2013년 12월 GM홀덴은 2017년에 호주 완성차 제조공장에 대한 철수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약 20만 명이 영향을 받으며 210억 호주달러에 이르는 파급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기도 하였다.⁵⁴⁾ 특히 2014년 한국GM의 군산공장 구조조정 당시에도 GM홀덴의 호주 엘리자베스공장의 구조조정 사례와 유사하다는 보도⁵⁵⁾가 있었던 만큼 GM홀덴과 한국GM은 유사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GM홀덴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GM의 호주 진출⁵⁶⁾

1856년 마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남호주에 설립된 홀덴(JA Holden & Co.)은 1908년 자동차 차체수리로 사업을 전환하였다. 이후 1917년부터 차체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1919년에 차체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HMBB(Holden's Motor Body Builders Ltd.)를 설립하였다.

HMBB가 호주에서 GM에게 차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1924년부터 홀덴과 GM은 사업을 같이 하기 시작했으며, GM이 1926년 GM호주(GM Australia Ltd.)를 설립한 이후에는 완전분해방식(CKD: Complete Knock Down)으로 수입한 부품과 HMBB가 생산한 차체를 조립하여 자동차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대공황으로 1930년 3만 4천 대를 생산하던 HMBB의 생산량은 1931년 1,651대로 급감하게 된다. 이로 인해 1931년 GM이 HMBB를 인수하

54) 「GM홀덴, 2017년 호주 완성차 제조 공장 철수 발표」(2013. 12. 12),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1262120185&code=920501(검색일: 2019. 5. 10).

55) 「한국지엠 구조조정, 호주 사례와 닮았다」(2014. 1. 26),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1262120185&code=920501(검색일: 2019. 5. 10).

56) 홀덴의 초기 성장과정과 GM과의 인수내용은 Wikipedia(<https://en.m.wikipedia.org/wiki/Holden>, 검색일: 2019. 8. 11); ABC News(<https://www.abc.net.au/news/2013-12-11/timeline-holden-history/5150240>, 검색일: 2019. 8. 11)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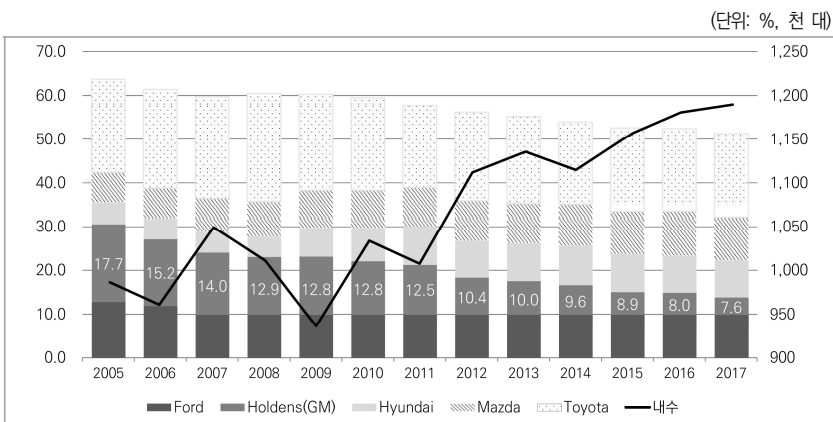
고 GM호주와 합병하여 GM홀덴(GMH: GM-Holden's Ltd.)을 설립하게 된다.

나. 호주사업 철수 발표 전후 GM홀덴의 경영상황⁵⁷⁾

GM홀덴은 1931년에 설립된 이후 약 90년간 호주에서 영업활동을 한 기업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GM이 호주사업을 철수하기로 발표한 전후기간에 대해 GM홀덴의 경영상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GM홀덴의 호주시장 내 점유율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05년 17만 대를 판매하여 호주 자동차 시장의 17.7%를 차지 하던 GM홀덴의 점유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에 12.9%로 하락하였다. 이후 GM홀덴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까지 12%대를 유지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넘어선 듯 보였으나 GM홀덴의 2011년 호주 내 판매대수는 12.6만 대로 감소하였으며 2012년의 시장점유율은 10%대인 10.4%로 이정보

그림 2-11. 호주 내 시장점유율



주: 수입차를 포함한 시장점유율이며, 시장점유율은 왼쪽, 내수현황은 오른쪽임.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세계자동차통계," <http://www.kama.or.kr/TotalBoardController>(검색일: 2019. 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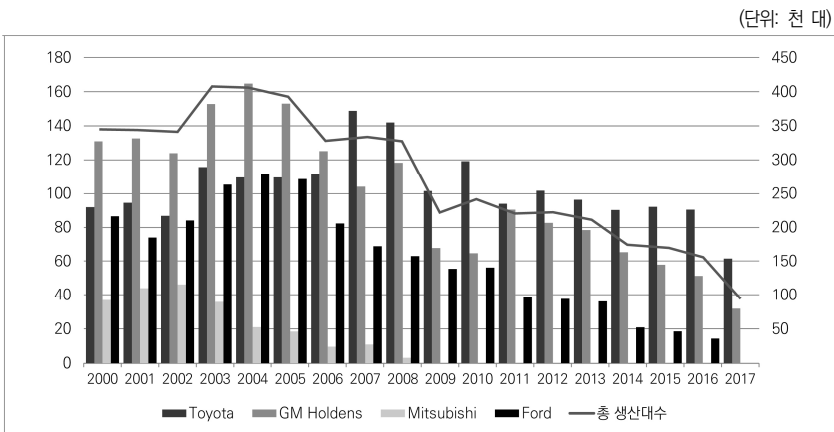
57) GM홀덴은 비상장기업으로 재무자료를 구할 수 없어 생산자료를 이용하여 경영상황을 평가하도록 한다.

다 더 하락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후에도 GM홀덴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호주시장 철수가 발표된 2013년에는 10.0%로, 호주시장에서 생산시설이 철수된 2017년에는 7.6%까지 하락한다.

GM홀덴의 생산량은 시장점유율보다 더 좋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2000년 13.1만 대를 생산하던 GM홀덴의 자동차 생산량은 2004년 16.4만 대로 최고치를 기록한다. 그러나 이후 감소 추이로 전환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인 2009년에는 6.7만대로 생산량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2011년에는 8.8만 대로 생산량이 반등하면서 경영상황이 회복하는 듯 보였으나 2012년에 8.2만 대로 다시 감소한 이후 2013년에는 7.8만 대로 감소한다. 결국 GM은 2013년 12월 2017년 말에 호주공장의 가동을 중지할 것을 발표하게 된다.

이러한 호주 내 자동차 생산량 감소는 비단 GM홀덴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호주 내 다른 완성차 기업의 생산량 역시 감소하는 추이로 전환되면서 호주 철수를 발표하였다. 미쓰비시는 2002년(4.6만 대) 이후, 포드는 2004년(11.1만 대) 이후, 도요타는 2007년(14.8만 대) 이후

그림 2-12. 호주 내 주요 완성차 기업의 생산량 추이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세계자동차통계," <http://www.kama.or.kr/TotalBoardController>(검색일: 2019. 8. 12).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기업 중 미쓰비시는 GM보다 앞선 2009년에 호주에서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였으며, 2013년 5월에는 포드가 2016년에 호주공장 철수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2014년 2월에는 도요타 역시 2017년 말에 호주에서의 생산을 중지한다고 발표한다.⁵⁸⁾

다. GM의 호주사업 철수 배경

GM의 호주사업 철수 배경은 한국GM 사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GM 본사의 경영전략의 변화가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2013년에는 유럽 시장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함과 동시에 호주시장에서의 철수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2015년에는 신흥시장인 인도네시아·태국·러시아에서도 공장 철수 및 생산중단을 결정하는 등 GM 본사는 판매량보다는 수익구조 개편을 위해 노력하였다.⁵⁹⁾

표 2-8. 2013년 이후 GM의 글로벌 사업장 철수 현황

철수국가	발표시점	철수 형태	발표 직전 생산량
유럽(쉐보레 철수)	2013년 12월 5일	유럽사업 철수	17.1만 대
호주	2013년 12월 10일	공장 철수	11.4만 대
인도네시아	2015년 2월 26일	공장 철수	1.2만 대
태국	2015년 2월 27일	공장 철수	5.5만 대
러시아	2015년 3월 18일	생산중단	6.6만 대
유럽(오펠 매각)	2017년 3월 6일	매각	98.4만 대
인도	2017년 5월 18일	내수시장 철수	2.9만 대
남아프리카공화국	2017년 5월 18일	이스즈에 지분 매각	4.1만 대

자료: 「한국GM 철수위기: ①호주·유럽·인도·남아공서 잇따라 철수한 GM, 한국에서도 떠날까」(2018. 2. 13),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3/2018021302177.html(검색일: 2019. 8.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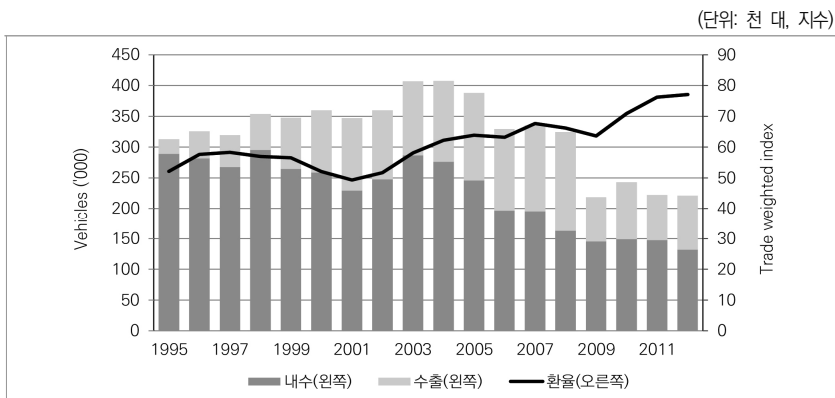
58) Australian Government(2017), p. 3.

59) 「한국GM 철수위기: 호주·유럽·인도·남아공서 잇따라 철수한 GM, 한국에서도 떠날까」(2018. 2. 13),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3/2018021302177.html(검색일: 2019. 8. 13).

더불어 GM의 호주 철수 이유로 호주달러화의 평가절상,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비용, 협소한 국내시장에 비해 높은 경쟁구조, 태국과의 FTA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⁶⁰⁾ 이는 GM홀덴뿐만 아니라 포드 및 도요타 등 호주 완성차 업체가 직면한 문제로 호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었음을 의미한다.

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2014)⁶¹⁾에 의하면 2000~13년 중 호주달러화는 약 42% 평가절상되었으며, 환율의 평가절상으로 수입 자동차의 경쟁력은 20~30% 증가한 반면, 수출 자동차의 경쟁력은 30~4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13. 호주의 자동차 생산량과 무역가중 환율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2014), p. 66, [그림 2-10].

2012년 호주 자동차 산업의 시간당 노동비용을 주요 자동차 생산국과 비교한 결과 호주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독일 다음으로 높게 조사되는 등 호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었다.⁶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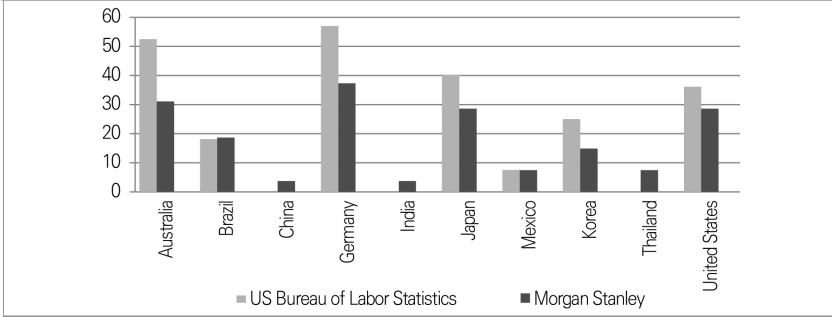
60) 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2014), pp. 41-75; Clibborn, Lansbury, and Wright(2016), pp. 2-14.

61) 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2014), p. 66.

62) 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2014), pp. 60-62.

그림 2-14. 주요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시간당 노동비용

(단위: 호주달러)



주: 원본 자료 중 호주의 노동비용 자료만 조사된 ABS의 결과는 생략함.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2014), p. 62, [그림 2-6].

이외 호주의 자동차 관세율은 5%로 일본 및 미국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며, 태국과의 FTA로 태국에서 생산된 일본차 수입이 크게 증가⁶³⁾하는 등 경쟁이 심화되었다.

표 2-9. 주요국의 2013년 자동차 실행관세율(Applied Tariff)

(단위: %)

국가	승용차	상용차	자동차 부품
호주	5	5	5
브라질	35	35	0~18
중국	25	6~25	3~25
EU	10	22	3~4.5
인도	60~100	10	10
일본	0	0	0
멕시코	20	20	0~5
한국	8	10	8
태국	80	40	10, 30
미국	2.5	0~25	0~2.5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2014), p. 288, [표 B.1].

63) 이재호(2007), pp. 8~9에 의하면 2005년 발효된 호주·태국 FTA로 소형 상용차의 관세는 2005년부터, 승용차의 관세는 2006년부터 모두 철폐되었으며, 2006년 태국산 일본차의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약 3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호주의 반응과 현재 상황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호주의 자동차 산업은 2000년대 중반부터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2006년 7만 5천 명이던 근로자 수는 2013년 4만 4천 명으로 약 40% 감소한 바 있다.⁶⁴⁾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GM홀덴, 도요타, 포드 등 호주 내 완성차 제조기업 3개 사가 모두 호주 철수를 발표하여 다수의 언론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쇠퇴 원인과 생산공장이 집중되어 있는 남호주 및 빅토리아 지역의 고용감소 문제를 다수 언급하였다. 그리고 Stanwick, Circelli, and Lu(2015)⁶⁵⁾에서도 당시 3개 사는 1만 1,350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호주 내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의 종사자 수는 4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어 대량해고와 지역경제 악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GM홀덴의 경우만 살펴보면 호주 철수를 발표할 당시 엘리자베스 지역에는 약 1,600여 명, 포트 멜버른(Port Melbourne)과 랑랑(Lang Lang) 지역에는 약 1,300여 명 등 총 2,900여 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었다.⁶⁶⁾ GM홀덴은 정리해고가 필요했던 엘리자베스 지역의 근로자를 위해 2014년 홀덴 이직센터(HTC: Holden Transition Centre)를 설립하여 이직 프로그램(Transition Program)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7년 말 현재 약 800여 명의 근로자는 이직에 성공하였으나 약 950여 명의 근로자는 당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⁶⁷⁾

그리고 GM홀덴은 생산공장 철수 이후에도 200개의 전국 판매망에 6천여 명을 고용하여 유통(판매)과 수리를 위한 사업은 지속할 예정이다.⁶⁸⁾ 특히 포

64) 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2014), p. 176.

65) Stanwick, Circelli, and Lu(2015), p. 5.

66) 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2014), p. 180.

67) "Holden: Nearly 1,000 employees remain at Elizabeth factory as the final countdown begins" (2017. 10. 20), <https://www.abc.net.au/news/2017-09-20/some-950-employees-remain-at-holden/8964996>(검색일: 2019. 9. 4).

트 멜버른에는 글로벌 디자인센터를, 랑랑에는 성능시험장을 유지할 예정이며, 이 두 지역에는 약 350여 명의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를 유지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⁶⁹⁾ 이러한 가운데 GM은 2018년 8월 호주의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인력을 150명 추가한 500명 규모로 확대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율주행 및 전기차 등 고급 차량개발 역량을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⁷⁰⁾ 이러한 신규 인력 충원과 기존 인력 유지는 대량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 2018년 1월 영국의 GFG 얼라이언스가 엘리자베스 공장을 인수하여 전기차 생산공장으로의 전환계획을 발표하여 호주정부 관계자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나 인수가격 차이로 GM이 이를 거부한 상황이다.⁷¹⁾

한편 호주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2008년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한 신차계획(the New Car Plan: New Car Plan for a Greener Future)을 수립하였다.⁷²⁾ 이의 일환으로 수립된 자동차 산업 전환계획(ATS: Auto-motive Transformation Scheme)에 따르면 자동차 및 부품 생산기업, 자동차 제조장비기업, 자동차 관련 서비스 기업은 연구개발 투자의 50%, 설비투자의 15%를 지원받을 수 있다.⁷³⁾ ATS는 2011~20년까지 운영될 예정

68) "Holden Honours Its Manufacturing Legacy; Completes Transformation to Sales, Engineering and Design Business" (2017. 10. 20), <https://media.gm.com/media/au/en/holden/news.detail.html/content/Pages/news/au/en/2017/oct/1020-Holden.html>(검색일: 2019. 9. 4).

69) Australian Government(2017), p. 9.

70) GM Pressroom, "GM Holden adding 150 additional engineers in australia to focus on advanced vehicle developing; Strengthens GM's expansive engineering footprint In Asia pacific," <https://media.gm.com/media/vn/en/chevrolet/home.detail.html/content/Pages/news/vn/en/2018/aug/GM-Holden-engineers.html>(검색일: 2019. 9. 5).

71) Reuters, "Billionaire Gupta looks to make electric cars in Australia," <https://www.reuters.com/article/us-australia-ev-gfg/billionaire-gupta-looks-to-make-electric-cars-in-australia-idUSKBN1FB0DF>(검색일: 2019. 9. 5); InsideEVs, "UPDATE: Former GM Holden Factory In Australia Might Make Electric Cars," <https://insideevs.com/news/336131/update-for-mer-gm-holden-factory-in-australia-might-make-electric-cars/>(검색일: 2019. 9. 5).

72) 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2014), p. 130.

73) ATS Overview, <https://www.business.gov.au/assistance/automotive-transformation-scheme>(검색일: 2019. 9. 2).

(2011~15년: 15억 호주달러, 2016~20년: 10억 호주달러)으로 호주 자동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전환,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 신제품 개발 및 신 시장 개척 등을 통해 산업 구조조정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Australian Government(2017)에 의하면 호주정부 및 연방정부는 제조업 발전과 정리해고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프로그램에 GM홀덴·도요타·포드 등 철수기업이 일부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GM홀덴과 도요타는 실직자를 위한 Skills and Training Initiative 프로그램에 3천만 호주달러를 제공하였으며, 포드는 GRIIF (Geelong Region Innovation and Investment Fund)와 MNIIF (Melbourne's North Innovation and Investment Fund)에 참여하였다.⁷⁴⁾ 이와 같은 기업의 참여는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소결

본 장은 ① 까르푸의 한국시장 철수 ② GM의 군산공장 폐쇄 ③ 미쉐린의 일본 오타공장 폐쇄 ④ GM홀덴의 호주사업 철수의 네 가지 사례를 통해서 다국적기업의 진출에서 철수까지의 과정을 조사하였다. 특히 철수에 이르게 된 원인과 투자유치국(host country)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았으며, 정부 및 기업의 대응과 현재 상황 등을 정리하였다. 네 가지 사례에 의하면 다국적기업은 공통적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 생산비용과 수요 등 투자유치국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익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현지법인과 생산시설을 철수하거나 다른 국가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집단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철수 후 고용 보장을 위한 노력 측면에

74) Australian Government(2017), pp. 6-8.

서는 사례별로 차이가 있었다. 까르푸·미쉐린·GM홀덴의 사례에서는 고용 승계 문제를 해결한 후 철수하거나 이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실적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아직 구조조정 과정이라서 단정 하기는 어렵지만 한국GM의 경우 노동자에 대한 지원노력이 그다지 눈에 보이지 않았다.

네 가지 사례조사를 통하여 경쟁력 유지를 위한 산업정책 수립 및 이행, 철수 시 발생하는 사회문제 공동 대응, FDI 인센티브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라는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5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제3장

K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1. 투자자 국적·산업·지역별 분포
2. 철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성
3. 소결



다국적기업의 철수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지만 과거에 많은 사례가 관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좀 더 많은 철수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다국적기업을 포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철수사례를 통해서 이들 기업 중 철수하는 기업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철수하지 않는 기업과 비교해서 살펴본다. 제1절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자 국적·산업·지역별 현황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이들 기업 중 철수하는 기업의 특성을 철수하지 않는 기업과 비교·분석한다.

1. 투자자 국적·산업·지역별 분포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은 ①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② 외국인이 의결권을 가진 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이 10% 이상이며 ③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절차를 거친 기업을 의미한다.⁷⁵⁾ 2018

그림 3-1. 대륙별 분포(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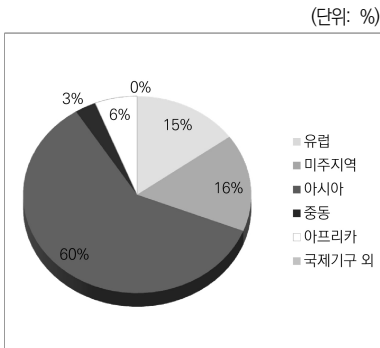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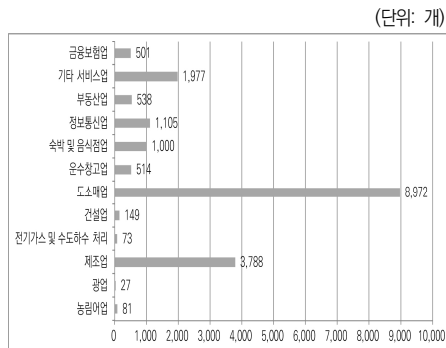


그림 3-2. 산업별 분포(2018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통계」(검색일: 2019. 8. 16)를 토대로 저자 작성

75)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19. 11. 1 시행) 제27조, <http://www.law.go.kr/lumLsLinkPop.do?lspnttninfSeq=123882&chrClsCd=010202>(검색일: 2019. 8. 16).

년 12월 기준 1만 8,725개의 기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1만 4,556개의 법인 기업, 4,143개의 개인사업자, 7개의 비영리법인, 19개의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분류된다.⁷⁶⁾ 산업별 분포를 보면 도소매 및 유통 분야가 48%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제조업(20%), 기타 서비스업(11%), 정보통신업(6%) 순으로 많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대륙별 분포를 보면 아시아(60%), 미주(16%), 유럽(15%) 순으로 많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별로는 중국(17.1%), 일본(16.9%), 미국(11.8%), 홍콩(4.7%), 싱가포르(4.0%) 순으로 많았는데, 이들 상위 5개국 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4.5%이다. 전체 산업별 분포와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에서도 도소매업과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1. 상위 5개국 산업별 분포(2018년)

(단위: 개, %)

표준산업분류	중국	일본	미국	홍콩	싱가포르
	3205	3170	2211	886	746
1위	도소매업	제조업	제조업	도소매업	도소매업
	1,801(56.2%)	1,281(40.4%)	621(28.1%)	272(30.7%)	196(26.3%)
2위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제조업
	398(12.4%)	944(29.8%)	596(27.0%)	177(20.0%)	134(18.0%)
3위	제조업	기타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제조업	기타 서비스업
	341(10.6%)	290(9.1%)	373(16.9%)	157(17.7%)	106(14.2%)
4위	기타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정보통신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279(8.7%)	225(7.1%)	292(13.2%)	98(11.1%)	84(11.3%)
5위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108(3.4%)	125(3.9%)	105(4.7%)	57(6.4%)	74(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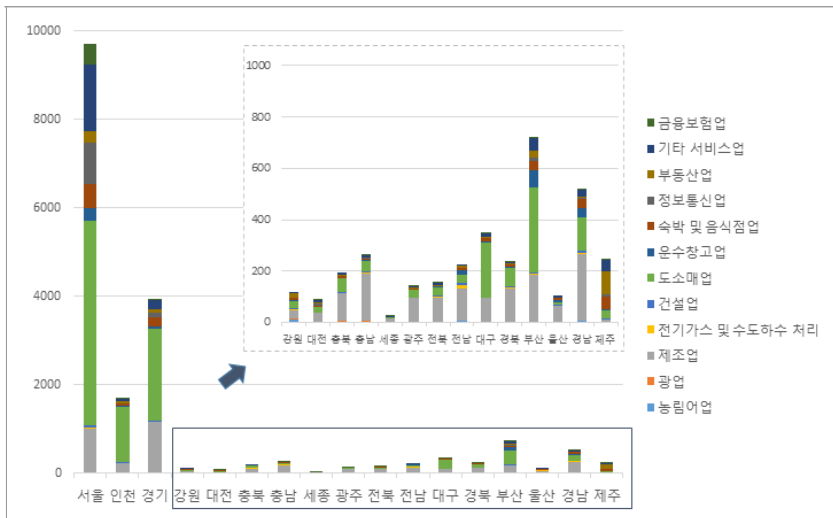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통계" (검색일: 2019. 8. 16)를 토대로 저자 작성.

76) 공공데이터포털,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https://www.data.go.kr/dataset/3074034/fileData.do>(검색일: 2019. 8. 16).

전체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51.7%와 81.8%는 각각 서울 혹은 인천·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수도권에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제주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제조업의 비중이 크다. 특히 부산·대구·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50% 이상이다. 한편 KOTRA(2015)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지원지역 내에 입지한 외투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⁷⁷⁾

그림 3-3. 지역·산업별 분포(2018년)

(단위: 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통계" (검색일: 2019. 8. 16)를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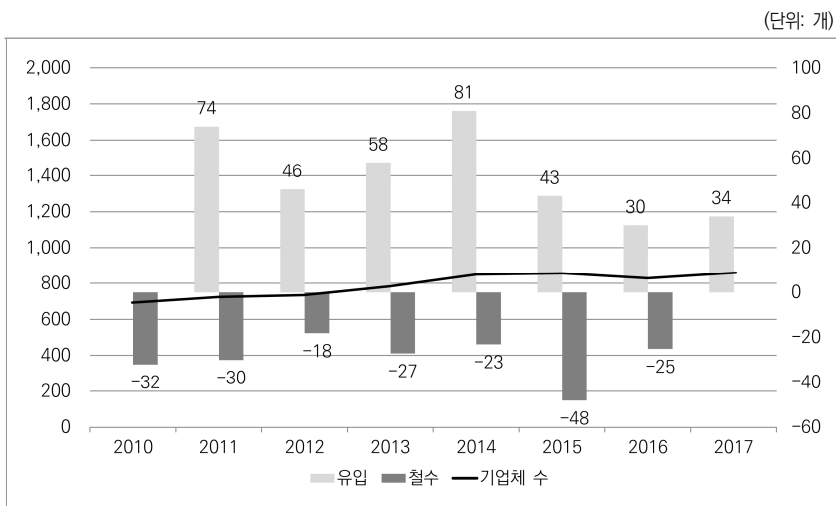
2. 철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성

본 절은 철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통계청 '기업

77) 외국인 투자지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중은 9.21%인 반면 이들 기업의 투자 규모는 전체의 26.77%를 차지한다.

활동조사에서 나타나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철수하는 기업(철수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지속기업)으로 구분하고, 두 그룹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우리의 분석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기업활동조사에서 ‘외국자본기업’으로 분류된 외국인자본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이다.⁷⁸⁾ 기업활동조사가 포괄범위가 협소하고⁷⁹⁾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 절의 외국인 투자기업과 본 절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중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기업체의 특성에 대한 의미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 3-4. 외국인 투자기업의 진입과 철수 현황(2010~17년)



자료: 통계청MDIS, “기업활동조사”(검색일: 2019. 8. 16).

78) 다른 장·절과의 통일성을 위해서 기업활동조사에서 ‘외국자본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을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부를 것이다.

79) 기업활동조사는 국내의 회사법인 중 상용근로자 50인 이상,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기업체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며,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50인 미만이어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분석기간은 2010~16년이며 이 기간 중 일부 동안이라도 외국자본비율이 지속적으로 50% 이상 유지한 기업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이 중 2016년이나 그 이전에 사라지는 기업을 철수하는 기업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기업을 진입하는 기업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우리 분석대상이 되는 총 기업의 수는 1,059개이며, 이 중 진입한 기업은 366개, 2010년 이전 혹은 이후에 진입하고 계속 시장에 남아 있는 기업(지속기업)은 856개, 철수한 기업(철수기업)은 203개이다.

표 3-2. 지속기업과 철수기업의 평균값과 중간값 비교

(단위: 백만 원, 명, %)

연도	변수	(1) 지속기업(A)		(2) 철수기업(B)		(3) (A-B)/A(%)		(4) A/B(%)	
		평균값	중간값	평균값	중간값	평균값	중간값	평균값	중간값
2010	총자산	538,669	53,695	158,189	27,361	70.6	49.0	340.5	196.2
	순이익	19,151	5,524	4,974	627	74.0	88.6	385.0	880.9
	노동자 수(명)	341	131	152	69	55.4	47.1	224.1	189.1
2011	총자산	515,313	56,420	207,434	26,259	59.7	53.5	248.4	214.9
	순이익	18,449	5,450	8,620	869	53.3	84.1	214.0	627.1
	노동자 수(명)	338	129	162	68	52.1	47.3	208.8	189.7
2012	총자산	517,612	57,202	223,121	29,789	56.9	47.9	232.0	192.0
	순이익	16,034	4,690	6,292	561	60.8	88.0	254.8	836.0
	노동자 수(명)	339	132	175	81	48.3	38.6	193.2	163.0
2013	총자산	458,015	57,656	175,516	23,835	61.7	58.7	261.0	241.9
	순이익	16,646	4,754	5,074	643	69.5	86.5	328.0	739.3
	노동자 수(명)	318	131	140	68	56.0	48.1	227.4	192.6
2014	총자산	502,560	54,275	194,048	21,632	61.4	60.1	259.0	250.9
	순이익	13,463	3,922	3,781	505	71.9	87.1	356.1	776.6
	노동자 수(명)	305	126	138	63	54.7	50.0	220.7	200.0
2015	총자산	511,020	53,101	142,668	17,294	72.1	67.4	358.2	307.0
	순이익	12,884	3,891	3,273	275	74.6	92.9	393.6	1,414.7
	노동자 수(명)	304	126	158	57	48.1	54.8	192.7	221.1
2016	총자산	505,397	55,934	257,165	30,480	49.1	45.5	196.5	183.5
	순이익	13,826	3,967	3,086	500	77.7	87.4	448.1	793.3
	노동자 수(명)	314	125	115	57	63.4	54.4	272.9	2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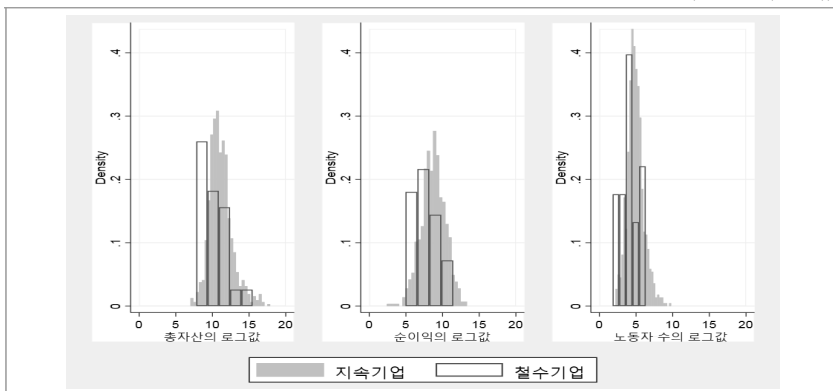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MDIS, "기업활동조사"(검색일: 2019. 8. 16).

[표 3-2]는 지속기업과 철수기업의 총자산, 순이익(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노동자 수(상용노동자 수)의 평균값과 중간값 그리고 지속기업과 철수기업 간의 평균값과 중간값의 차이를 보여준다. 특히 이 표는 다음 두 가지를 시사하고 있다. 첫째, 총자산, 순이익, 노동자 수의 평균값과 중간값 모두 지속기업은 철수기업보다 크다. 지속기업이 철수기업보다 좀 더 많은 순이익을 거두며 많은 투자를 해왔으며, 자본과 노동의 보완성 때문에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지속기업과 철수기업의 순이익과 총자산에서의 차이와 비교해서 두 그룹 간 노동자 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평균적인 지속기업의 총자산과 순이익은 철수기업의 340%와 385%에 이르나 노동자 수에 있어서는 224%로 상대적으로 작다. 예외적으로 2016년에는 두 그룹 간 총자산 차이가 노동자 수 차이보다 작았지만, 여전히 그룹 간 노동자 수 격차는 그룹 간 순이익의 격차보다 작다.

[그림 3-5]는 2016년 지속기업과 철수기업의 총자산, 순이익, 노동자 수의 로그값의 히스토그램을 보여준다.⁸⁰⁾ 총자산이나 순이익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그림 3-5. 지속기업과 철수기업 히스토그램 비교(2016년)

(단위: 비중(합계=1))



자료: 통계청MDIS, "기업활동조사"(검색일: 2019. 8. 16).

80) [그림 3-5]의 히스토그램은 지속기업과 철수기업의 분포를 비교 가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반적인

로 지속기업과 철수기업의 두 집단 간 노동자 수의 차이는 적은 것으로 보이며, 각 집단 내에서도 노동자 수의 기업 간 격차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부록의 [부록 그림 1]은 2010~15년의 히스토그램을 보여주는데, 역시 [그림 3-5]와 비슷한 모습이다.

순이익과 총자산은 외국투자기업이 철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변수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순이익을 거두면서 소규모의 총자산을 소유한 기업들은 쉽게 철수할 것이다. 하지만 [표 3-2]와 [그림 3-5]는 비록 순이익에서는 격차가 있어도 철수기업과 지속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는 순이익 등 다른 요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철수기업들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순이익의 차이로 설명할 수 없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

3. 소결

자본가와 달리 노동자는 지역 및 산업 간 이동의 제약이 커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수단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생산성과 이익에 따라서 노동을 쉽게 조정할 수 없다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제도적으로 일정 부분까지는 정당화되기 마련이다. 철수기업과 지속기업 간 고용의 격차가 기업의 철수 결정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순이익의 차이보다 작다는 것은 이런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부분적으로 원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철수기업이 순이익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고용 수준을 줄일 수 있었다면 철수할 때 노동시장에 아주 급격한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런 해석은 좀 더 엄밀한 분석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히스토그램에서 사용하는 빈도(frequency) 대신에 합계가 1이 되는 비중을 사용한다.

제4장

K

외투기업 활동이 국내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1. 연구 배경

본 장에서는 외투기업의 생산 축소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990년 이후 지난 30년간 국가 간 해외직접투자는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외투기업의 유입은 국내 경제성장, 노동 및 자본시장, 기술파급 효과 및 생산성 증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기존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연구 역시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국내기업의 생산성, 노동수요 및 임금, 투자,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생산 조정을 비롯하여 기대에 못 미치는 제품품질, 경영관리의 어려움, 개도국의 임금상승 등으로 해외로 진출했던 다국적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다국적기업의 해외지사의 철수 및 축소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국적기업 해외지사의 철수 및 축소는 투자유치국(host country)의 노동시장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2장의 다국적기업의 철수 사례에서 자세히 논의한 바와 같이 2018년 2월 GM이 한국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을 때 한국 언론과 학계는 지역 경제침체, 실업률 증가, 관련 기업의 매출 감소 등의 우려를 표명하였다. 약 2,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군산공장 철수는 군산공장에 근무하던 노동자의 실업뿐만 아니라 관련 국내기업들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군산공장 철수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출 및 다국적기업의 해외지사 축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생산 축소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기업 수준 데이터와 지역 투입-산출 연계표를 활용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같은 지역 및 산업에서 다국적기업의 생산활동이 감소했을 때의 지역 내 수평적 효과(intra-region horizontal effect), 다른 지역이지만 같은 산업에서 다국적기업의 생산활동이 감소했을 때의 지역 간 수평적 효과(inter-region horizontal effect), 같은 지역 내 전방산업(downstream industry)에서 다국적기업의 생산활동이 감소했을 때의 영향(intra-region upstream effect), 다른 지역의 전방산업에 진출해 있던 다국적기업이 생산을 축소했을 때 미치는 영향(inter-region upstream effect), 같은 지역 내 후방산업(upstream industry)에서 다국적 기업의 생산활동이 감소했을 때 미치는 영향(intra-region downstream effect), 다른 지역의 후방산업에서 다국적 기업이 활동을 축소했을 때 미치는 영향(inter-region downstream effect)을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 같은 산업 내의 수평적 효과는 다국적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동일한 산업의 국내기업으로 이동하거나 경쟁이 완화되면서 국내기업의 고용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다국적기업의 생산 축소 및 실업 증가가 경제 전체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이것이 국내기업의 생산 감소로 이어지거나 외투기업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사라지면서 국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생산 축소는 산업 간 연계를 통해 국내기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외투기업과 국내기업과의 관계에 따라 전방 영향과 후방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공급받는 관계에서 외투기업이 생산 축소를 결정한다면 국내기업에 대한 중간재 수요 감소 및 고용 감소를 야기할 수 있는 반면, 다국적기업에서 일자리를 잃었지만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노동자들이 전방산업에 있는 국내기업으로 흡수되는 경우 오히려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관계에서 외투기업의 생산 축소 결정은 국내기업의 외투기업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달라진다. 외투기업에 의해 공급되는 중간재가 특별하고 쉽게 대체재를 찾기 어렵다면 이는 전방 산업에 있는 국내기업 생산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반면 국내기업이 쉽게 대체재를 찾을 수 있다면 외투기업의 축소 결정은 국내 기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용해 외투기업의 축소 결정이 산업 간 및 지역 간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기존 연구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다국적기업의 출현이 국내 생산성, 고용, 투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미 다수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경제 전체 및 산업 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더 나아가 산업 간 연계를 고려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Békés, Kleinert, and Toubal(2009)는 헝가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및 동시 변위치 회귀분석(simultaneous quantile regression) 방법론을 이용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때 같은 산업 내의 수평적 효과뿐만 아니라 투입-산출 계수를 이용해 산업 간 전방 및 후방 파급효과와 국내기업의 수출 여부를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직접투자는 같은 산업 내 국내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산업 간 연계를 통해 특히 수출기업의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산업 간 연계를 고려해 고용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Acemoglu *et al.*(2016)가 있다. 2000년대 이후 미국의 중국 수입 확대가 고용 감소에 미친 영향을 수입 확대와 경쟁 심화에 의한 산업 내 직접적 효과와 산업 간 연계를 통한 간접적 효과를 고려하였으며 이외에도 지역경제 전체의 재분배 및 수요 효과를 고려해 분석하였다. 특히 전방산업에서 중국 수입의 확대가 국내 중간재 공급 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인 후방효과(upstream effect)와 후방산업에서의 중국 수입 확대가 국내

중간재 수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인 전방효과(downstream effect)를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는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간 연계와 재분배 및 수요효과를 통해 미국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였다.

반면 다국적기업의 생산 축소 결정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경제학 분야에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경제학의 산업조직론 분야에서 일반적인 기업의 퇴출(shutdown)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기업의 퇴출 결정요소로 기업의 규모, 업력, 생산성, 자본 및 기술집약도를 지적하고 있다. Melitz(2003)와 Bernard *et al.*(2003)은 이에서 더 나아가 수출기업과 비수출기업의 퇴출 확률을 비교한 결과, 수출기업의 퇴출 확률이 비수출기업의 퇴출 확률보다 낮다는 것을 보였고, Bernard and Jensen(2007)은 기업 구조가 기업 퇴출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국적기업일수록 퇴출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 Brainard and Riker(1997a, 1997b), Braconier and Ekholm(2000)에서 언급한 다국적기업의 특징인 “입지조건에 제약받지 않는(footloose)” 개념과 일치한다. 다국적기업은 종종 이윤 극대화를 위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조정하거나 부정적 충격에 대해 국내기업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국내기업보다 높은 노동수요 탄력성을 보인다. 다국적기업의 생산 재조정은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를 경험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생산활동 축소를 야기함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 유출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 분야에서는 미흡하지만 경영학의 조직 이론 분야에서 다국적기업의 해외지사 철수 결정이 국내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최근 소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Sofka, Preto, and Faria(2014)는 다국적기업 철수는 다국적기업의 인적자본을 가진 노동자를 국내 노동시장에 공급하게 되고 따라서 국내기업은 특정 인적자본을 가진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포르투갈 다국적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국적기업 철수로 해고된 노동자가 새롭게 고용되었을 때 받는 임금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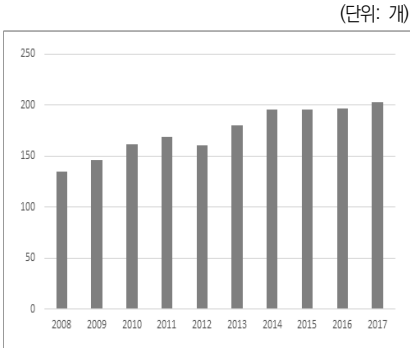
한 결과, 생산성이 높았던 다국적기업에서 해고된 노동자는 새로운 직장에서 높은 임금을 받는 반면 다국적기업에서 근무한 근속년수가 긴 노동자는 새로운 직장에서 오히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생산 축소 결정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적 시각과 분석방법을 바탕으로 산업 내 수평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간 및 산업 간 연계를 고려한 파급효과까지 고려해 포괄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3. 실증분석

가.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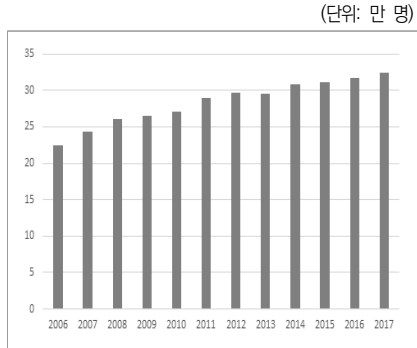
본 분석에서는 2006년부터 2017년 기간에 대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기업활동조사와 2010년 기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투입-산출표를 주 데이터로 사용한다.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는 고용인이 50인 이상이고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인 기업의 산업, 지역, 고용, 매출, 외국인지분비율, 수출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산업은 1차 산업과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2자리 한국표준산업분류로 구분되어 있다. 2006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기업의 평균 외국인지분비율을 계산해 50% 이상이면 외투기업으로 분류하였고 그 외에는 국내기업으로 구분하였는데 데이터에 포함된 외투기업 수는 1,276개이다. 외투기업이 보유한 국내지사 수는 2008년 135개에서 2017년 203개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외투기업의 고용 역시 분석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17년 기준 전체 고용의 약 8%를 차지한다.

그림 4-1. 외투기업의 국내지사



자료: 통계청MDIS, "기업활동조사"를 토대로 저자 계산.

그림 4-2. 외투기업의 고용



자료: 통계청MDIS, "기업활동조사"를 토대로 저자 계산.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을 비교해 보면 고용 및 매출 기준으로 외투기업이 국내기업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투기업의 평균 고용 및 매출은 각각 333명과 38.3억 원인 반면, 국내기업의 평균 고용 및 매출은 각각 299명과 19.9억 원을 기록한다. 외투기업의 산업 및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산업별로는 도매 및 상품 증개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소매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경남·충남·경북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표 4-1. 외투기업의 산업별 분포(2017년)

산업	산업코드	고용자 수	기업 수
도매 및 상품 증개업	46	54,294	31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42,376	61
소매업; 자동차 제외	47	35,714	2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22,283	7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20,245	36

주: 산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따름.

자료: 통계청MDIS, "기업활동조사"(검색일: 2019. 7. 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2. 외투기업의 지역별 분포(2017년)

지역	지역코드	고용자 수	기업 수
서울	11	6,556	596
경기	31	5,332	172
경남	38	1,558	41
충남	34	1,088	32
경북	37	888	24

자료: 통계청MDIS, "기업활동조사"(검색일: 2019. 7. 3)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산업연관표는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2010년 기초가격으로 계산된 지역산업 연관표를 사용하였고, 산업분류는 중분류를 기준으로 기업활동조사 산업과 연계하여 사용하였다. 지역구분은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을 포함한 총 16개 지역⁸¹⁾이 포함되었다. 기업활동조사 자료와 산업연관표 자료를 연계하여 총 48개 산업을 구성하였고, 이 중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광업, 수도사업, 공공행정 및 국방 등 8개 산업을 제외한 40개 산업에 포함된 기업을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산업분류와 지역분류는 부록의 [부록 표 1]과 [부록 표 2]에 포함되어 있다.

나. 분석모형

본 절에서는 외투기업의 매출 감소가 국내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실증분석모형을 소개한다. 분석모형은 Békés, Kleinert, and Toubal(2009)와 Acemoglu *et al.*(2015)의 방법론을 참고하였고,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실증분석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81) 세종특별자치시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EMP_{ijrt} = \beta_0 + \beta_1 H_{jrt} + \beta_2 H_{j(-r)t} + \beta_3 U_{jrt} + \beta_4 U_{j(-r)t} + \beta_5 D_{jrt} + \beta_6 D_{j(-r)t} + v_j + v_r + v_t + e_{ijrt} \quad [\text{식 4-1}]$$

종속변수는 t 년도, r 지역, j 산업에 포함된 국내기업 i 의 고용자 수의 로그 값을 나타낸다. H_{jrt} , D_{jrt} , U_{jrt} 는 외투기업이 사업을 축소할 경우, 지역 내 동일산업 및 다른 산업의 국내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나타낸다. 반면 $H_{j(-r)t}$, $D_{j(-r)t}$, $U_{j(-r)t}$ 는 외투기업의 사업 축소가 다른 지역에 위치한 국내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나타낸다. 파급효과 변수에 대한 정의는 [표 4-3]에 정리하였다. 추가적으로 산업별·지역별·연도별 관찰되지 않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산업(v_j), 지역(v_r), 연도(v_t) 더미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4-3. 외투기업의 파급효과 변수 정의

변수	정의
H_{jrt}	지역 내 수평적(동일산업) 파급효과
U_{jrt}	지역 내 수직적(후방) 파급효과 : 외투기업이 지역 내 후방산업의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D_{jrt}	지역 내 수직적(전방) 파급효과 : 외투기업이 지역 내 전방산업의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H_{j(-r)t}$	지역 간 수평적(동일산업) 파급효과
$U_{j(-r)t}$	지역 간 수직적(후방) 파급효과 : 외투기업이 다른 지역 후방산업의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D_{j(-r)t}$	지역 간 수직적(전방) 파급효과 : 외투기업이 다른 지역 전방산업의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 저자 작성.

외투기업의 파급효과를 정의하기 위해 우선 [식 4-2]에서 F_{jrt} 를 j 산업, r 지역의 t 년도 전체 기업 매출액 대비 외투기업의 매출액 비중으로 정의하였다. $Foreign_{it}$ 는 더미변수로 50% 이상 외국인 지분을 갖는 기업은 1의 값을, 그 외의 경우는 0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F_{jrt} 변수와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표에

서 계산된 투입계수를 활용하여 [식 4-3]-[식 4-8]에 해당하는 파급효과 변수를 정의하였다. 지역 내 동일산업, 전방산업, 후방산업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는 [식 4-3]-[식 4-5]에 정리하였고, 수식 [식 4-6]-[식 4-8]은 서로 다른 지역 간 동일산업, 전방산업, 후방산업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를 보여주고 있다.

$$F_{jrt} = \left[\sum_{i \in j,r} Foreign_{it} \times Sales_{it} \right] / \sum_{i \in j,r} Sales_{it} \quad [식 4-2]$$

$$H_{jrt} = \theta_{jr} F_{jrt} \quad [식 4-3]$$

$$U_{jrt} = \sum_{k \neq j,r} \theta_{jkr} F_{krt} \quad [식 4-4]$$

$$D_{jrt} = \sum_{m \neq j,r} \theta_{mjr} F_{mrt} \quad [식 4-5]$$

[식 4-3]의 r 지역, 산업 j 의 수평적 파급효과(H_{jrt})는 r 지역, 산업 j 의 투입계수 θ_{jr} 와 r 지역, 산업 j 의 외투기업 비중 변수(F_{jrt})로 정의하였다. [식 4-4]는 지역 내 후방 파급효과(U_{jrt})를 나타내는데, θ_{jkr} 은 r 지역, j 산업의 산출물 중 같은 지역 k 산업의 투입물로 사용된 비중을 나타낸다. k 산업에서 활동하는 외투기업이 사업을 축소할 때, 같은 지역 후방산업인 j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후방 파급효과 변수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j 산업의 후방 파급효과는 j 산업의 산출물을 투입물로 활용하는 모든 산업 $k(k \neq j)$ 에 대한 합으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식 4-5]는 지역 내 전방 파급효과(D_{jrt})를 나타내는 변수로, θ_{mjr} 은 j 산업 투입물 중 m 산업에서 조달한 비중을 의미한다. m 산업에서 활동하는 외투기업이 생산을 축소할 때, 같은 지역 전방산업인 j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후방 파급효과 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j 산업의 전방 파급효과는 투입물을 공급한 모든 산업 $m(m \neq j)$ 에 대한 합으로 변수를 구성하였다.⁸²⁾

82) 전방 파급효과와 후방 파급효과 변수 구성과 관련해서는 Javorcik(2004)와 Békés, Kleinert, and Toubal(2009)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H_{j(-r)t} = \sum_{l \neq r} \theta_{jl} F_{jlt} \quad [\text{식 4-6}]$$

$$U_{j(-r)t} = \sum_{k \neq j} \sum_{l \neq r} \theta_{jkr} F_{klt} \quad [\text{식 4-7}]$$

$$D_{j(-r)t} = \sum_{m \neq j} \sum_{s \neq r} \theta_{mjr} F_{mst} \quad [\text{식 4-8}]$$

[식 4-6]-[식 4-8]은 지역 간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구성된 변수이다. 타 지역인 l 지역($l \neq r$)의 동일산업 j 에서의 외투기업을의 사업 축소가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변수를 [식 4-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 4-7]의 θ_{jkr} 은 r 지역, j 산업의 산출물 중 타 지역인 l 지역, k 산업의 투입물로 사용된 비중을 나타내며, [식 4-7]을 통해 l 지역, k 산업에서 활동하는 외투기업이 사업을 축소할 때 다른 지역 후방산업인 j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식 4-8]의 θ_{mjr} 은 r 지역, j 산업 투입물 중 s 지역, m 산업에서 조달한 비중을 나타내고, [식 4-8]은 s 지역, m 산업의 외투기업 축소가 다른 지역 국내기업 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만약 외투기업의 사업 축소로 해고된 노동자들이 같은 산업의 국내기업으로 이동한다면, 이는 국내 고용의 증대로 이어져, H_{jrt} 혹은 $H_{j(-r)t}$ 의 계수는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외투기업의 사업 축소로 해당 산업이 위축되고 경제 전체의 수요를 감소시키면 이는 국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평효과계수는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후방 연관효과를 통해 외투기업의 사업 축소가 후방산업에 위치한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경우, 외투기업의 생산 축소는 국내기업에 대한 중간재 수요를 감소시켜 그 결과 국내기업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외투기업에서 일자리를 잃었지만,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축적한 노동자들이 후방산업에 있는 국내기업으로 흡수된다면 오히려 국내기업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방 연관효과와 경우, 외투기업의 사업 축소가 전방산업에 위치한 국내기업의 중간재 조달을 어렵게 하고 기업활동을 축소시킨다면 국내 고용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여부에 따라 D_{jrt} 혹은 $D_{j(-r)t}$ 의 계수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4. 외투기업을 전후방 파급효과 기초통계

코드	산업명	후방 파급효과		전방 파급효과	
		지역 내 (U_{jrt})	지역 간 ($U_{j(-r)t}$)	지역 내 (D_{jrt})	지역 간 ($D_{j(-r)t}$)
12	화학물질, 화학제품, 의약품 제조업	0.0060	0.0297	0.0036	0.0153
16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0111	0.0268	0.0083	0.0331
17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제조업	0.0043	0.0177	0.0069	0.0243
18	자동차 제조업	0.0010	0.0041	0.0076	0.0270
26	도매 및 소매업	0.0156	0.0444	0.0043	0.0121
37	금융 및 보험업	0.0128	0.0083	0.0024	0.0073
	전체 산업 평균	0.0037	0.0069	0.0055	0.0200

주: 1) 산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따름.

2) 해당 표의 산업코드는 파급효과를 받는 국내기업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예를 들면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제조업의 전방 파급효과는 해당 산업의 후방에 있는 외투기업이 사업을 축소할 때, 전기 및 전자, 정밀기기 제조업에 속한 국내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MDIS, "기업활동조사"(검색일: 2019. 8. 1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4]는 [식 4-4], [식 4-5], [식 4-7], [식 4-8]에서 계산된 외투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를 주요 산업에 대해 지역 내, 지역 간으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외투기업의 지역 내 후방 파급효과의 전체 산업 평균은 0.0037인 반면 지역 간 후방 파급효과의 평균은 0.0069로 지역 내 효과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후방 파급효과는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주요 서비스산업에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고, 특히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지역 간 파급효과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방 파급효과의 경우에는, 금속가공제품, 자동차 제조업 산업의 지역 간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 외투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를 고려한 국내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4. 실증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함의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 4-5]는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 내 및 지역 간 동일산업, 전방산업, 후방산업 파급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외투기업의 동일산업 파급효과는 지역 내, 지역 간에 모두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투기업의 매출이 증가할 때, 같은 산업 국내기업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외투기업의 매출이 감소할 때 같은 산업 국내기업의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외투기업의 후방산업 파급효과는 지역 내, 지역 간 모두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투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면, 중간재 및 부품을 공급하는 후방산업의 국내기업 고용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반면 외투기업의 매출 감소는 후방산업에 위치한 국내기업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방산업의 국내 고용에 대한 파급효과의 경우,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투기업이 사업을 확장할 때 전방산업에 있는 국내기업의 고용이 감소하고, 외투기업이 사업을 축소할 때는 전방산업에 위치한 국내기업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산업에 진출해 있는 외투기업의 높은 비중을 고려할 때 이런 추정 결과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외투기업의 사업 확장이 전방 서비스 직종에서 근무하던 국내 인력을 흡수했으며 반대로 외투기업이 사업 축소할 경우 해고된 노동자들이 전방에 위치한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제5장의 연구의 한계에서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다.

표 4-5.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전체
동일산업 파급효과(지역 내)	0.868** (0.344)
동일산업 파급효과(지역 간)	0.484*** (0.128)
후방산업 파급효과(지역 내)	2.960*** (0.422)
후방산업 파급효과(지역 간)	1.069*** (0.415)
전방산업 파급효과(지역 내)	-1.024*** (0.285)
전방산업 파급효과(지역 간)	-0.372*** (0.0868)
Constant	4.962*** (0.0793)
지역, 산업, 연도 효과	0
N	118050
Adj R ²	0.125

주: 1) () 안은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임.

2) *p<0.10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는 수출기업 정보를 활용하여 외투기업의 파급효과가 수출기업과 비수출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4-6]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 결과, 외투기업이 국내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수출기업과 비수출기업에 있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투기업이 후방산업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수출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투기업의 사업 확장 및 축소가 후방산업에 위치한 국내 수출기업의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수출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높은 수출기업이 외투기업에 중간재 및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외투기업의 사업 확장, 축소에 후방산업의 국내기업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6. 외투기업이 수출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전체
동일산업 파급효과(지역 내)	2.897*** (0.546)
동일산업 파급효과(지역 내) X 수출기업	-2.321*** (0.639)
동일산업 파급효과(지역 간)	-1.313*** (0.182)
동일산업 파급효과(지역 간) X 수출기업	2.303*** (0.173)
후방산업 파급효과(지역 내)	0.149 (0.496)
후방산업 파급효과(지역 내) X 수출기업	6.352*** (0.563)
후방산업 파급효과(지역 간)	-2.597*** (0.461)
후방산업 파급효과(지역 간) X 수출기업	6.519*** (0.324)
전방산업 파급효과(지역 내)	-0.390 (0.348)
전방산업 파급효과(지역 내) X 수출기업	-0.774* (0.398)
전방산업 파급효과(지역 간)	-0.577*** (0.104)
전방산업 파급효과(지역 간) X 수출기업	0.305** (0.123)
Constant	4.998*** (0.0786)
지역, 산업, 연도 효과	0
N	118050
Adj R ²	0.140

주: 1) () 안은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임.

2) *p<0.10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표 4-5]의 결과는 외투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모두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 결과는 사업 축소가 아닌 사업 확장에 의해서 도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외투기업의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만을 표본으로 이용해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외투기업의 사업 축소만을 분석에 포함하기 위해 파급효과 변수들을 차분하여 전년도에 비해 파급효과 변수가 감소한 경우만 표본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투입산출계수는 모든 연도에 대해 동일한 값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파급효과 변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외투기업의 매출비중 변화로 인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종속변수는 로그 고용의 차분을 사용하고 독립변수는

표 4-7. 외투기업의 사업 축소가 국내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1)	(2)	(3)	(4)	(5)	(6)
동일산업 파급효과(지역 내)_diff	0.303 (0.245)					
동일산업 파급효과(지역 간)_diff		0.307*** (0.098)				
후방산업 파급효과(지역 내)_diff			0.146 (0.222)			
후방산업 파급효과(지역 간)_diff				1.203*** (0.283)		
전방산업 파급효과(지역 내)_diff					-0.248* (0.139)	
전방산업 파급효과(지역 간)_diff						0.0663 (0.049)
Constant	0.145 (0.135)	0.145 (0.134)	-0.0368 (0.0483)	0.0079 (0.0408)	-0.0238 (0.0401)	0.0410 (0.0411)
지역, 산업, 연도 효과	0	0	0	0	0	0
N	38409	44342	51111	45505	48327	44328
Adj R ²	0.002	0.003	0.001	0.002	0.002	0.002

주: 1) () 안은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임.

2) *p<0.10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각각의 파급효과 변수를 차분하여 차분값이 음수인 경우만 표본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7]에 정리되어 있다.

외투기업의 사업 축소가 국내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2), (4), (5)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2), (4)의 결과는 외투기업이 사업을 축소할 때, 동일산업 및 후방산업의 국내기업 고용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한 결과이다. 이러한 효과는 지역 간 파급효과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5)의 결과는 외투기업의 사업 축소가 전방산업의 국내기업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해석으로서 외투기업에서 해고된 노동자가 동일 지역 전방산업의 국내기업으로 이동한다고 추측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추정 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기업과 그 기업의 노동자가 연결된 통계자료를 필요로 한다.

5. 소결

본 장에서는 외투기업의 사업 축소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의 관계를 지역 및 산업으로 구분하여 지역 내 수평적 효과, 지역 간 수평적 효과, 지역 내 후방효과, 지역 간 후방효과, 지역 내 전방효과, 그리고 지역 간 전방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기업 활동조사와 지역산업 투입-산출표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외투기업이 사업을 축소할 때, 동일산업 및 후방산업의 국내기업의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추정 결과는 특히 자동차 산업 등 종합기계산업의 경우와 같이 전방산업에 중소기업 협력사들이 다수 존재할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추가적인 파급효과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국GM의 구조조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르노삼성자동차의 생산절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최근 상황에서 이러한 추정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5장

K

PMW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 다국적기업 철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1.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다국적기업의 철수와 관련해서 가장 큰 우려는 일자리 축소 등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이다. 일자리 축소에 대한 우려는 제2장의 모든 철수사례에서 관찰되고 있다(제2장을 요약한 표 5-1 참고). 지역·산업 간 분산투자가 가능한 대기업 및 자본가와와는 달리 노동자는 지역·산업 간 이동에 대한 제약이 커서 다국적기업 철수에 따른 충격에 좀 더 민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마련된 노동시장의 제도화된 경직성이 오히려 다국적기업이 철수할 때 노동시장에 급격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철수기업이 수익성 악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고용 수준을 줄일 수 있다면 철수할 때 노동시장에 아주 급격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중 철수기업과 지속기업 간 창출하는 고용량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은 이 점을 시사한다. 또한 제4장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이 국내 기업의 고용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중간재를 공급하는 산업(후방산업)의 국내기업들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정홍준 외(2018)가 산업부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제시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의 중소협력사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해서, 제4장은 외국인 투자기업 데이터를 활용한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의 철수가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유화와 동시에 투자보호를 지향해온 국제투자법의 시각에서 다국적기업의 철수와 투자금 회수를 막을 수는 없다. 외교부(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독일 등 94개국(미발효 6개국)과 양자 간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체결했으며, 한·칠레FTA(제10장), 한·미FTA(제11장), 한·EU FTA(제7, 8장) 등과 같이 FTA에도 투자에 관한 별도의 장(chapter)을 두어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는 원칙⁸³⁾을 명문

표 5-1. 사례조사 요약표

	까르푸의 한국 철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미쉐린의 일본 오탁공장 폐쇄	GM홀덴 호주철수
진출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시장 개방 이후 1994년 한국까르푸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2년 대우자동차 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승용사업장, 창원사업장 일체, 베트남 생산법인, 9개 해외판매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9년 오탁공장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화학연구소와 일본 미쉐린타이어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공황 이후 1931년 GM홀덴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GM의 HMBB 인수 및 GM호주 합병
진출 후 재무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002년 이후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만 이익을 유지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 이후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액은 2012년부터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타이어 산업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년대 중반 이후 시장점유율 및 생산량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 내 완성차 기업의 생산량 동반하락
철수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사의 영업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시장점유율 기준 상위 3위 내에 속하지 못하는 경우 철수 한국 내 시장점유율 4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사의 경영전략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량 중심 → 수익성 중심 유럽 시장 내 쉐보레 브랜드 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공장은 쉐보레 차종 생산 유럽 수출 불가에 따른 가동률 급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비용구조와 채산성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다른 공장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생산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채산성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사의 경영전략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저하 호주달러화의 평가절상 높은 생산비용 및 경쟁구조
현지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수기업에 고용승계 매각차익 양도소득세 미납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GM에 대한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실원인에 대한 의혹 대량실업 우려 지역경제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탁공장 내 직원에 대한 실업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량실업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GM홀덴, 도요타, 포드 등 철수발표
대응 및 현재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매각 양도소득세 납부규정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및 산업은행 실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실원인은 판매부진과 고비용구조 GM 64억 달러, 산업은행 7.5억 달러 지원 희망퇴직 및 전환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0명 무급휴직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공장 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쉐린타이어로의 업무 재배치 및 이직 지원 오탁공장 부지에 관련 부서 운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 콜센터, 정보시스템, 물류 등 관리부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 홀덴 이직센터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직 프로그램 운영 사업유지 분야에 신규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판매) 및 수리 사업 지속 디자인 센터 및 성능시험장 유지 호주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 유지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산업 전환계획 발표

자료: 제2장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83) 외국인 투자 보호를 위한 원칙은 내국민대우(NT), 최혜국대우(MFN),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FET: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송금의 자유 보장 등이 대표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화했다.⁸⁴⁾ 이를테면 한·미 FTA 협정문(2011)에는 제11.3조(내국민대우) 제1항과 제2항에서 자국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에게 부여해야 하며, 제11.4조(최혜국 대우)와 제11.5조(대우의 최소 기준)에서는 각각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최혜국대우(MFN)와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FET: Fair and Equitable Treatment)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7조(송금) 제1항에서 양국은 적용 대상이 되는 투자의 일부 매각, 부분적 혹은 완전한 청산에 따른 대금이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항도 파산, 지급불능 시 채권자의 권리 보호, 법집행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투자활동을 영위하다가 본사의 방침이나 우리나라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철수하거나 공장폐쇄 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마찬가지로 한·EU FTA 협정문(2011)의 제8.3조에서 한·미 FTA와 유사한 예외 상황에서만 투자유치국(host country)이 자본이동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내외적인 변화에 따라서 다국적기업은 투자유치국으로의 진입과 철수를 통해 세계경제의 생산공정을 조정해 왔다. 다만 완전 철수보다는 디자인 센터 등 연구관리부서와 물류센터 등 서비스 관리부서는 유지하면서 해당 국가의 산업경쟁력에 맞추어 경영활동을 지속하였다. 이를테면 제2장의 사례에서 미쉐린이 일본의 고비용 구조와 금융위기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되어 오토공장을 폐쇄하고 생산공장을 다른 국가로 이전한 것과 달리 R&D 센터와 판매에 필요한 시설은 일본에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GM 역시 호주달러화의 평가절상, 높은 생산비용, 경쟁구조 심화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된 생산시설을 호주에서 철수하였을 뿐, 호주 내 자동차 판매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유통(판매) 및 수리사업과 성능시험장, 그리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글로

84) FET 의무의 경우 투자협정과 중재재판부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FET 위반으로 해석된 국가행위의 예는 UNCTAD(2012)에 제시되어 있다.

별 디자인센터 등은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8년 8월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율주행 및 전기차 등 고급차량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호주 내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인력을 기존 350명 수준에서 500명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 역시 한국이 가지는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에 투자하였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착금액 기준 외국인 투자 현황에 의하면 최근(2014~18년 평균)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에 집중되어 있

표 5-2.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2014~18년)

(단위: 백만 달러)

산업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전 산업	12,238	16,586	10,802	13,729	17,111	14,093
농림수산업	2	7	56	6	9	16
제조업	5,003	5,080	2,858	5,606	6,979	5,10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75	1,924	12		6	40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026	1,212	825	1,483	1,196	1,14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04	97	129	698	70	240
비금속 광물제품	2,204	3	2	100	88	479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등	362	408	431	909	121	446
전기장비	53	171	195	310	395	225
자동차 및 트레일러	127	222	551	654	4,572	1,225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	56	1,325	142	165	101	358
서비스업	7,177	10,174	7,747	7,951	10,022	8,614
도매 및 소매업	895	1,033	1,095	1,080	1,268	1,074
정보통신업	1,378	909	1,670	880	2,813	1,530
금융 및 보험업	2,841	5,588	2,711	3,221	3,317	3,536
부동산업	512	614	1,028	992	1,266	882

주: 1) 음영은 대분류 내 상위 3개 산업을 표시함.

2)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등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를 의미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검색일: 2019. 5. 29).

다. 이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에 투자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들 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매력이 지속될 경우에만 투자를 유지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철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은 더 이상 저비용 구조에 의한 생산 측면에는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산업정책을 통하여 다른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매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4월에는 조선산업의 위기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하였으며, 2019년 1월에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년 6월에는 기존 양적·추격형에서 혁신선도형 제조강국 실현을 위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였다.⁸⁵⁾ 다만 이러한 제도 도입 및 발표만으로 한국의 투자매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표된 계획들이 한국의 투자매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2. 다국적기업 철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다국적기업의 진입·철수에 대응한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고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관련 중견·중소기업이 있다. 따라서 이 집단들에 대한 재교육·재고용과 업종 전환,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은 중요하다. 이런 지원은 피해를 입은 집단을 지원한다는 형평성을 위해서뿐 아니라 다음의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리가 기대된다. 첫째, 한계기업

85) 조선산업 발전전략은 산업통상자원부(2018b)에, 규제 샌드박스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에,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은 산업통상자원부(2019a)에 관련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의 퇴출을 통한 노동과 자본의 재배치를 유도하여 총요소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이런 재정 지원의 도입을 통해서 피해를 입는 이익집단의 정치적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리하여 외국자본의 눈에 우리 경제가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비추어져서 외국자본 유치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 정부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정책적으로 제공한 유인으로 혜택만 보고 철수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BIT와 FTA 투자 챗터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약속된 국내투자 및 제반 지원조건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이런 혜택을 회수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다국적기업 철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데 이 보고서의 남은 부분을 할애하고자 한다.

가. 철수 시 발생하는 사회문제 공동 대응

제2장의 모든 철수사례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해고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조정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집단은 언제나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피해집단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이들이 신속하게 경쟁의 무대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조정지원제도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사례는 EU의 세계화조정기금(EGF: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이다. EGF의 역할은 무역의 구조적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주요국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실직한 노동자나 자영업자에게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자기계발 등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EU집행위의 비상계획안에 노딜 브렉시트 관련 위험에 대비해서 EGF를 활용해 지원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기기도 했다. EGF의 규정에 따르면 다른 국가로 경제활동이 이전될 경우(a delocalization of activities to third countries)에도

실직한 노동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국적기업의 철수에 따른 실직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⁸⁶⁾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사례는 프랑스의 「플로랑주법」이다. 2014년 올랑드 정

글상자 5-1. 프랑스 플로랑주법(The Florange Law)

Law n°2014-384 OF MARCH 29, 2014 aiming at recapturing the real economy

이 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기업이 사업장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 사실을 근로위원회(works council)와 관계당국에 공지해야 한다. 그리고 폐쇄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을 사업주가 검색해야 하며, 적합한 인수기업이 나타나면 이를 근로위원회와 상의해야 하고 근로위원회는 인수제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만약 적합한 인수기업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업주는 근로위원회와 관계당국에 인수기업 검색을 위한 조치, 접수된 인수제안과 특성, 인수제안을 거부한 이유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의 의무

- 근로위원회, 관계당국, 잠재 인수자에게 사업장 폐쇄 계획 공지
- 잠재 인수자를 위한 대상 사업장의 보고서 준비
- 필요한 경우 환경평가 수행
- 인수 신청기업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 제공
- 인수제안에 대한 적절한 평가 수행
- 각 인수제안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 제공

근로위원회의 역할

- 사업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최대 8일 이내에 인수제안을 공지
- 근로위원회가 인수자 검색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의무에 따라 정보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함
- 근로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인수자 검색절차에 대한 분석과 분석방법 및 범위
 - 잠재 인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평가
 - 인수제안 검토와 인수자 검색 및 인수사업 준비 지원

자료: 플로랑주법(The Florange Law), <http://www.florange-opportunities.fr/en/content/13-the-florange-law> (검색일: 2019. 10. 10).

86) REGULATION(EU) No. 1309/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on the 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2014-2020) and repealing Regulation(EC), No. 1927/2006,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3R1309&from=EN>(검색일: 2019. 10. 10).

부에 의해서 도입된 이 법안은 기업의 사업장 폐쇄를 어렵게 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유지하자는 것이다(글상자 5-1 참고). 다만 이러한 법안은 기업이 유연하게 한계사업장을 정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기업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한 잠재적인 투자를 저해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지역경제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지역경제의 침체나 위기가 왔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해 왔다.⁸⁷⁾ 조선 산업의 위기 이후 2018년에 울산 동구, 경남 통영·고성·거제 등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으며, 2019년 4월에 지역경제 회복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연장을 결정했다.⁸⁸⁾ 한국GM의 공장폐쇄 이후 군산 역시 2018년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노동자와 실직자를 지원하고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진입과 철수도 생산요소(자본)의 이동이라는 점에서 세계화의 한 가지 모습이고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서 좀 더 빈번한 자본유출입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의 이동(무역)과 자본이동 모두를 포괄하는 세계화의 장기적 이익 그리고 단기적 부작용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세계화에 대응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 체결 등 무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조정지원제도로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FTA 조정법)」을 마련했다.⁸⁹⁾ 우리의 「FTA 조정법」은 FTA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노동자만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면, EGF는 좀 더 포괄적인 세계화에 의해 실직한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87)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88) 산업통상자원부(2019b), p. 1.

8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9. 4. 1.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타법 개정).

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별지역 지정 역시 피해기업이나 노동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닌 시·도지사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며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직종 및 산업의 신속한 조정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자본이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세계화에 대한 조정지원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

다국적기업의 철수에 대응하여 국가재정으로 일반적인 실업급여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철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고, 내수시장이 비교적 협소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세계화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회안전망 강화는 필요하다. 또한 실업급여처럼 수동적인 사회보장수단이 아닌 노동자의 인적 개발을 위한 훈련, 구직활동 지원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수단에 대한 지원이라면 재취업의 확률을 높이고 노동력의 재배치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FTA 조정법」을 넘어서는 좀 더 포괄적인 세계화 관련 조정기금 설립을 위한 국가재정의 투입 여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자동차 산업과 같은 종합기계산업의 경우 다양한 중간재를 공급하는 중소 협력사들이 다수 존재하며 전후방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다국적기업 철수 이후 세제혜택, 대출이자 감액 등 유동성을 지원해 주는 것도 지역경제 회복에 필요한 일일 것이다.⁹⁰⁾ 하지만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철수 이후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한국GM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떠난 자리를 양대노총, 정부, 기업이 협력하여 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MPS코리아의 전기차 완성차 4개사와 부품업체 등 중견·벤처 기업들을 유치했다.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친환경·미래차

90) 관계부처 합동(2018b).

중심의 지역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기대된다. 이때 우선은 참여기업들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지만, 지역경제를 위한 지속적인 일감과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전기차 등 미래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이 이미 지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조달시장 등을 통한 구매도 검토해볼 만한 정책대응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다국적기업의 노력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철수하는 다국적기업은 해당 국가에서의 지속적 경영활동을 위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철수로 인한 일자리 대책을 제시하는 사례가 종종 관찰된다. 까르푸는 한국사업 철수 시 약간의 논란은 있었으나 매각협상 시 100% 고용승계, 임차매장 및 거래업체 승계, 임직원 급여 유지 등 민감한 문제를 논의한 후 사업장을 매각함에 따라 큰 사회문제 없이 한국에서 철수하였다. 다른 국가에서 철수했던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쉐린 역시 오타공장 폐쇄 발표 시 근로자의 이직을 위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GM홀덴은 호주 철수를 발표한 이후 2014년부터 홀덴이직센터를 설립하여 이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더불어 호주정부 및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리하고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일부 자금을 제공하는 등 철수로 인해 투자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달리 한국GM의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노동자와 군산지역 경제회복을 위한 지원노력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GM은 GM홀덴과 달리 희망퇴직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함에 따라 강제 정리하고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불필요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희망퇴직금으로 8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군산 내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GM의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즉각적인 정리하고

가 아닌 희망퇴직 등 자발적 퇴직을 유도했고 그 후 무급휴직이나 전환배치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노사 간 합의했다. 하지만 2005년 이래로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불법파견을 둘러싸고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법정 공방을 계속하고 있으며, 군산공장을 폐쇄할 때도 한국GM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정규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용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GM이 한국에서 생산·판매 및 연구개발 등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에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은 향후 기업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나. 외국인 직접투자 유인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한국GM 군산공장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은행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7.5억 달러의 시설투자자금을 지원하기로 협의하였다. 협의과정에서 GM 역시 R&D 및 디자인센터 역량 강화, 경쟁력 있는 신차 2종 배정, 대출금리 인하, 한국 내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설치, 총 65억 달러 추가 투자 및 지출 등을 약속하였다(표 2-7 참고). 따라서 협의 이후 이러한 협의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실제 2018년 7월 한국GM은 향후 생산부문 철수의 선행조치로 비취지는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산업은행이 적절한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 법인 분리에 대한 자료를 검토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은행은 법인 분리를 수용하고 한국GM으로부터 1) 신설 법인을 준중형 SUV 및 CUV 중점거점으로 지정 2) 향후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3) 추가 R&D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 노력 등 추가적인 약속을 받아냈다.⁹¹⁾ 이후 산업은행은 지원하기로 협의한 7.5억 달러 중 절반인 4,045억 원을 2018년 12월에 모두 지급하였다.

91) 「산은, GM과 R&D법인 분리 합의...한국을 연구거점으로 키운다」(2018. 12. 18), <https://mk.co.kr/news/economy/view/2018/12/788695/>(검색일: 2019. 9. 9).

이와 같이 특정조건을 만족하였을 때 부여되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사후관리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합당하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인책 역시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이라는 조건과 투자 산업, 규모, 지역 등 특정조건을 만족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따라서 철수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부여받은 인센티브가 특정조건을 만족하였는지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다.

표 5-3. 한국의 FDI 인센티브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자격요건	지원내용
조세 감면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수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 및 직접 관련된 소재·생산공정 등 관련 기술 수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시설을 설치·운영(2백만 달러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취득세, 재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간 100% (조례 확인)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간 100%
	외국인 투자지역	개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3천만 달러 이상 관광·레저, 국제회의: 2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1천만 달러 이상 연구개발시설: 2백만 달러 이상(연구원 10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단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1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5백만 달러 이상 	
	경제 자유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관광·레저, 국제회의: 1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의료기관: 5백만 달러 이상 연구개발시설: 백만 달러 이상(연구원 10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세, 재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간 100% (조례 확인)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간 100%
입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투자비용 3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지원
현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투자비용 30% 이상 제조업: 부품·소재 전문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수반사업 연구개발시설: 연구개발시설 신축(연구원 5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상 후 결정

주: 소득세, 법인세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자료: Invest Korea, "투자절차 및 인센티브," <http://www.investkorea.org/kr/foreigner/invest.do>(검색일: 2019. 9. 9).

우리나라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인책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일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에 대한 추징과 환수가 이뤄진다.⁹²⁾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⁹³⁾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 조항은 동법 제121조의5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등록이 말소되거나 폐업하는 경우,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장기 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와 이외 일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이 이뤄진다.

다만 조세 지원에 대한 추징규정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현금 지원에 대한 환수규정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360호) 제12조를 통해, 입지 지원에 대한 환수규정은 「외국인 투자지역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628호) 제19조, 제20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FDI가 이뤄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세금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공고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환수규정을 상향 입법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7년 말 EU가 우리나라를 조세 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폐지하고 현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투자유치지원제도의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어⁹⁴⁾ 현금 지원에 대한 환수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실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2조에는 현금지원계약에 환수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으며, 지원금의 취소 및 환수규정은 각 지방정부의 차치법규(「기업

92) 조세 지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내용은 KOTRA(2019), pp. 42~43에, 현금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은 KOTRA(2019), pp. 51~52에, 입지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의 이행 내용은 KOTRA(2019), p. 56에 잘 정리되어 있다.

9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13호, 2019. 4. 30, 타법 개정).

94) 관계부처 합동(2018a), pp. 5~6.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철수할 경우 해당 투자로 인해 그동안 유발된 생산 및 고용 파급 등 경제적 효과, 철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력, 철수과정에서 국내 절차의 이행과정 소개, 이해 당사자에게 투명한 철수이유(재무정보) 중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와 같은 노력으로 외국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제고될 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사례조사와 실증분석 과정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관계들을 발견했으나 깊게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아래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것은 후속연구의 몫으로 남겨둔다.

첫째, 제2장의 사례조사에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노동시장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면 좀 더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테면 자동차 산업의 경우 생산의 가치사슬이 수직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때 관계의 특성이 층위마다 달라 다국적기업의 철수의 영향도 다를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주제일 것이다. 해고노동자의 이후 거취자료(재취업 여부 및 재취업까지 소요 기간 등), 지역경제 현황 자료(해당 지역 내 고용·실업·생산 등) 등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분석은 실시하지 못했다.

둘째, 제3장에서 철수기업과 지속기업 간 고용의 격차는 이 두 기업들 간 순이익의 격차보다 작다. 우리 보고서에서는 철수기업이 수익성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고용을 줄이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시사한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은 여러 가지 시장실패요인을 좀 더 엄밀하게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셋째, 제4장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축소가 전방산업의 국내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 가지 가능한 추측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고노동자가 전방산업의 국내기업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러한 추측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에 대한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이 퇴직 후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자료, 즉 기업-노동자가 연결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고서에서 제안한 대응방안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지는 못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현재의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좀 더 포괄적인 형태의 세계화에 대응 가능하게 변화할 때의 시나리오 분석은 흥미로운 연구주제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06. 「이랜드리테일 및 케이디에프유통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 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6-261호. (11월 6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ICT 규제 샌드박스 1월 17일 시행». 보도자료. (1월 10일)
- 곽 군. 2016. 「다국적 유통산업의 한·중 시장 마케팅 전략에 관한 비교 연구: 까르푸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대학원.
- 관계부처 합동. 2018a.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18-11. (7월 18일)
- _____. 2018b.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추가 지정 및 지역대책 보완방안. 산업경쟁 령강화 관계장관회의. (5월 29일)
- 기획재정부. 2018. 「제1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한국GM 관련 협상 결과 및 부품업체·지역 지원방안 논의». 보도자료. (5월 10일)
- 김동한. 2018. 「한국GM 사태의 원인과 전망».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제8권 6호.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김호섭, 송민준. 2019. 「엠에스오토텍의 GM군산공장 인수 추진 관련 한신평의 의견». 『Special Comment』. (4월 9일)
- 남옥진. 2006. 「이랜드, 한국까르푸 인수의 영향은?». 『산업메모』. 대우증권. (5월 2일)
- 백풍렬. 2006. 「까르푸 철수가 남긴 교훈». 『LG주간경제』. (5월 31일)
- 산업자원부. 2001. 「2002년 외국인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수여: 제2회 외국 기업의 날 행사를 맞이하여». 보도자료. (12월 9일)
- _____. 2002. 「세계 500대 기업의 40%인 197개 사, 한국에 투자». 보도자료. (1월 30일)
- 산업통상자원부. 2018a. 「군산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보도참고자료. (4월 4일)

- _____. 2018b. 「조선산업 발전전략 마련」. 보도참고자료. (4월 4일)
- _____. 2019a.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발표」. 보도자료. (6월 18일)
- _____. 2019b.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년간 지정 연장」. 보도참고자료. (4월 23일)
- 약 량. 2012. 「글로벌 할인점의 중한 시장 마케팅 전략에 관한 비교 연구: 까르푸 중한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대학원.
- 오민규. 2018. 「한국GM 부실의 진짜 원인, 실사에서 과연 밝혀질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미나 자료. 한국지엠부실 진짜 원인규명 대토론회. (4월 10일)
- 이재호. 2007. 「태국의 주요 FTA 추진정책과 자동차 산업 전망」. 『KIEP 지역경제 포커스』, 07-19호. (11월 2일)
- 이정희, 조영상, 김종진. 2012. 『유통산업의 공생발전 및 경쟁촉진 방안 연구』.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연구용역과제 최종보고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정홍준, 박성국, 박용철, 조성재, 황현일. 2018. 『한국지엠의 구조조정과 고용대책』. 연구보고서 2018-13. 한국노동연구원.
- 제갈정웅, 최도성, 광수근. 2008. 『Cross Border M&A 사례집』. 창해.
- 하상민. 2006. 「한국까르푸 M&A에 따른 할인점 재편 방향 검토」. 『Mirae Asset Equity Research』. (5월 13일)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2002. 「GM의 대우자동차 인수에 따른 영향」. (4월 11일)
- 한일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2013. 「일본의 타이어 시장 분석」.
- 황현일. 2018. 「GM의 글로벌 전략의 변화와 한국지엠 구조조정의 전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미나 자료. 한국지엠부실 진짜 원인규명 대토론회. (4월 10일)
- KOTRA. 2010. 「글로벌 기업의 일본 내 사업 철수·축소 동향 및 투자유치 시사점」. 『FDI Theme Report 10-003』.
- _____. 2015. 『GVC 발전단계 모델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지역별 외국인 투자 입지현황과 정책방향』. KOTRA 자료 15-007.
- _____. 2017. 『주요국 투자유치인센티브제도 조사』. KOTRA 자료 17-086.
- _____. 2019. 『Doing Business In Korea: 외국인 투자 가이드』. KOTRA 자료 19-009.

[일문자료]

- 日本ミシュランタイヤ株式會社. 2010. 「ミシュラン太田工場における商業用タイヤの生産を停止」. プレスリリース. (1월 15일)

_____. 2011. 「ミシュラン旧太田工場の土壌調査と対策について土地所有會社のオカモト(株)と共同で實施」. プレスリリース. (4月 15日)

[영문자료]

Acemoglu, Daron, David Autor, David Dorn, Gordon H. Hanson, and Brendan Price. 2016. "Import Competition and the Great US Employment Sag of the 2000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34, No. S1.

Australian Government. 2017. "Australian Government response to the Senate Economics References Committee Report: Future of Australia's Automotive Industry."

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 2014. "Australia's Automotive Manufacturing Industry." *Productivity Commission Inquiry Report*, No. 70.

Békés, Gábör, Jorn Kleinert, and Farid Toubal. 2009. "Spillovers from Multinationals to Heterogenous Domestic Firms: Evidence from Hungary." *The World Economy*, Vol. 32(10).

Bernard, Andrew B., Jonathan Eaton, J. Bradford Jensen, and Samuel S. Kortum. 2003. "Plants and Productivity in International Trad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3(4).

Bernard, Andrew B., and J. Bradford Jensen. 2007. "Firm Structure, Multinationals, and Manufacturing Plant Death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9(2).

Braconier Henrik and Karolina Ekholm. 2000. "Swedish Multinationals and Competition from High-and Low-Wage Loc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8(3).

Brainard, S. Lael and David A. Riker. 1997a. "U.S. Multinationals and Competition from Low Wage Countries."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R Working Paper, No. 5959. (March)

_____. 1997b. "Are U.S. Multinationals Exporting U.S. Jobs?"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R Working Paper, No. 5958. (March)

Carrefour. 2001. *2001 Annual Report*.

_____. 2006. *2006 Annual Report*.

- Clibborn, S, R. D. Lansbury, and C. F. Wright. 2016. "Who Killed the Australian Car Industry: The Employers, Government or Unions?" *Economic Papers*, 35(1). Wiley.
- JATMA. 2018. *Tyre Industry of JAPAN 2018*.
- _____. 2019. *Tyre Industry of JAPAN 2019*.
- Javorcik, Beata S., 2004.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domestic firms? In search of spillovers through backward linkages." *American Economic Review*, 94(3).
- Melitz, Marc J. 2003. "The Impact of Trade on Intra-Industry Reallocation and Aggregate Industry Productivity." *Econometrica*, 71(6).
- Sofka, Wolfgang, Miguel Torres Preto, and Pedro de Faria. 2014. "MNC Subsidiary Closures: What is the Value of Employees' Human Capital in New Job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45(6).
- Stanwick, John, Michelle Circelli, and Tham Lu. 2015. "The End of Car Manufacturing in Australia: What is the Role of Training?" *NCVER*.
- UNCTAD. 2012.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UNCTA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I.

[온라인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https://www.data.go.kr/dataset/3074034/fileData.do>(검색일: 2019. 8. 16).
- 「굿바이 재팬」. 2010. 『조선일보』. (3월 11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11/2010031100076.html(검색일: 2019. 9. 16).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플러스스토어즈 감사보고서(1999~2005)." <http://dart.fss.or.kr/dsab001/main.do?autoSearch=true>(검색일: 2019. 7. 8).
- 「까르푸, 32호 병점점 개점」. 2006. 『이데일리』. (1월 20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59686579719688&mediaCodeNo=257>(검색일: 2019. 7. 8).
- 「까르푸의 대한민국 탈출 작전」. 2006. 『한겨레 21』. (4월 12일).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11000/2006/04/021011000200604120605012.html>(검색일: 2019. 7. 11).
- 대법원. 2014.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법인(원천)세등부과처분

- 취소]». (7월 10일).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2%EB%91%9016466>(검색일: 2019. 7. 8).
- 「대우차 매각 GM의 대우차 인수배경과 향후 전략」. 2002. 『한국경제』. (4월 30일).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02043051128>(검색일: 2019. 7. 17).
- 대전지방법원. 2011. 「2011. 11. 16, 선고, 2010구합2649, 판결[법인(원천)세등 부과처분취소]». (11월 16일). <http://www.law.go.kr/preclnfoP.do?mode=0&evtNo=2010%EA%B5%AC%ED%95%A92649>(검색일: 2019. 7. 8).
- 「‘떡볶이’ 외국기업 근절한다…폐업 시 산업부장관 신고 의무화」. 2017. 『한국정책신문』. (1월 3일).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80>(검색일: 2019. 5. 2).
- 「‘믿음’ 저버린 이랜드…까르푸와 ‘고용승계’ 약속 불이행」. 2007. 『경향신문』. (7월 11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707111846411(검색일: 2019. 7. 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http://www.law.go.kr/lumLsLinkPop.do?lspntninfSeq=123882&chrClsCd=010202>(검색일: 2019. 8. 16).
- _____. 「외국인 투자지역운영지침」.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75133#j43:0>. (검색일: 2019. 9. 9).
- _____.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E%90%EC%9C%A0%EB%AC%B4%EC%97%AD%ED%98%91%EC%A0%95%EC%B2%B4%EA%B2%B0%EC%97%90%EB%94%B0%EB%A5%B8%EB%AC%B4%EC%97%AD%EC%A1%B0%EC%A0%95%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13740,20160106](http://www.law.go.kr/%EB%B2%95%EB%A0%B9/%EC%9E%90%EC%9C%A0%EB%AC%B4%EC%97%AD%ED%98%91%EC%A0%95%EC%B2%B4%EA%B2%B0%EC%97%90%EB%94%B0%EB%A5%B8%EB%AC%B4%EC%97%AD%EC%A1%B0%EC%A0%95%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13740,20160106)(검색일: 2018. 9. 10).
- _____. 「조세특례제한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검색일: 2019. 9. 9).
- _____.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98%84%EA%B8%88%EC%A7%80%EC%9B%90%EC%A0%9C%EB%8F%84%20%EC%9A%B4%EC%98%81%EC%9A%94%EB%A0%B9>(검색일: 2019. 9. 9).
- 「[브랜드 흥망사] ‘까르푸’ 기억하세요? 한국에서 실패한 글로벌 유통 공룡」. 2018.

- 『IT 동아』. (11월 26일). <https://it.donga.com/28417/>(검색일: 2019. 5. 10).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16950>.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검색일: 2019. 5. 29, 2019. 8. 16).
- 산업통상자원부 한-EU FTA. 「협정문: 한EU FTA」. <http://www.fta.go.kr/eu/doc/1/>(검색일: 2019. 9. 25).
-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협정문: 한미 FTA」. <http://www.fta.go.kr/us/doc/1/>(검색일: 2019. 9. 25).
- 「산은, GM과 R&D법인 분리 합의…한국을 연구거점으로 키운다」. 2018. 『매일경제』. (12월 18일). <https://mk.co.kr/news/economy/view/2018/12/788695/>(검색일: 2019. 9. 9).
- 「서울지방노동위 ‘이랜드 사측에 철퇴」. 2007. 『노동과 세계』. (7월 25일).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151>(검색일: 2019. 7. 11).
- 외교부. 2018. 「우리나라 투자보장협정 체결현황 2018. 4」. <https://www.data.go.kr/dataset/3040299/fileData.do>(검색일: 2019. 9. 25).
- 「외국계 할인점 “한국 벽 높네”」. 2005. 『매일경제』. (1월 18일). <https://www.mk.co.kr/news/home/view/2005/01/22450/>(검색일: 2019. 7. 9).
- 위키백과. 「하이퍼마켓」. <https://ko.wikipedia.org/wiki/%ED%95%98%EC%9D%B4%ED%8D%BC%EB%A7%88%EC%BC%93>(검색일: 2019. 7. 5).
- 「‘철수’ 통보만 하고 떠나는 외국 기업들…한국 진출 승인 때 고용 안전장치 만들라」. 2014. 『MK뉴스』. (3월 18일).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4/03/424569/>(검색일: 2019. 5. 2).
- 「취재 후] ‘떡튀’ 외국계 기업, 근로자는 ‘발동동」. 2016. 『KBS NEWS』. (8월 2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22230>(검색일: 2019. 5. 2).
- 통계청. “기업경영분석.”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검색일: 2019. 7. 8).
- 통계청MDIS. “기업활동조사.”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012(검색일: 2019. 8. 16).
- 플로랑주법(The Florange Law). <http://www.florange-opportunitites.fr/en/>

- content/13-the-florange-law(검색일: 2019. 10. 10).
- 한국까르푸. 2005. “한국까르푸 소개 및 상품구매전략.” (5월 18일). <https://slideplayer.org/slide/11221012/>(검색일: 2019. 7. 8).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세계자동차통계.” <http://www.kama.or.kr/TotalBoardController>(검색일: 2019. 8. 12).
- _____. “주요통계.” <http://www.kama.or.kr/CarDBCController>(검색일: 2019. 7. 17).
- 「‘한국적 유통’ 못 따라잡아서. 2006. 『한겨레』. (3월 22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0408.html(검색일: 2019. 7. 8).
- 「한국지엠 구조조정, 호주 사례와 닮았다. 2014. 『경향신문』. (1월 26일).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1262120185&code=920501(검색일: 2019. 5. 10).
- 「한국GM 창원공장도 ‘위기’…생산차종 판매량 4년 새 40\$ ‘뚝’. 2018. 『연합뉴스』. (3월 5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030404260003>(검색일: 2019. 7. 24).
- 「한국GM 군산공장 28일 매각 완료. 2019. 『매일경제 MBN』. (6월 25일).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6/452842/>(검색일: 2019. 9. 16).
- 「한국GM 실사보고서 “부실원인 GM과 불공정거래 규명 쉽지 않아”…“판매량 회복이 관건”. 2018. 『조선비즈』. (4월 29일).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9/2018042900417.html(검색일: 2019. 8. 8).
- 「한국GM 철수 위기: ⑨호주·유럽·인도·남아공서 잇따라 철수한 GM, 한국에서도 떠날까. 2018. 『조선비즈』. (2월 13일).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3/2018021302177.html(검색일: 2019. 8. 13).
- ATS(Automotive Transformation Scheme) Overview. <https://www.business.gov.au/assistance/automotive-transformation-scheme>(검색일: 2019. 9. 2).
- Bridgestone. 2012, 2014. “Bridgestone Data.” https://www.bridgestone.com/corporate/library/data_book/index.html(검색일: 2019. 9. 18).
- 「GM홀덴, 2017년 호주 완성차 제조 공장 철수 발표. 2013. kotra 해외시장뉴스. (12월 2일).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1262120185&code=920501(검색일: 2019. 5. 10).
- GM Pressroom. 2018. “GM Holden adding 150 additional engineers in

- australia to focus on advanced vehicle development; Strengthens GM's expansive engineering footprint in Asia pacific." (August 24). <https://media.gm.com/media/vn/en/chevrolet/home.detail.html/content/Pages/news/vn/en/2018/aug/GM- Holden-engineers.html> (검색일: 2019. 9. 5).
- "Holden Honours Its Manufacturing Legacy; Completes Transformation to Sales, Engineering and Design Business." 2017. Holden Pressroom. (October 20). <https://media.gm.com/media/au/en/holden/news.detail.html/content/Pages/news/au/en/2017/oct/1020-Holden.html> (검색일: 2019. 9. 4).
- "Holden: Nearly 1,000 employees remain at Elizabeth factory as the final countdown begins." ABC News. (October 20). <https://www.abc.net.au/news/2017-09-20/some-950-employees-remain-at-holden/8964996>(검색일: 2019. 9. 4).
- InsideEVs. 2018. "UPDATE: Former GM Holden Factory In Australia Might Make Electric Cars." (February 26). <https://insideevs.com/news/336131/update-former-gm-holden-factory-in-australia-might-make-electric-cars/>(검색일: 2019. 9. 5).
- Invest Korea. "투자절차 및 인센티브." <http://www.investkorea.org/kr/foreigner/invest.do>(검색일: 2019. 5. 16, 2019. 9. 9).
- KISVALUE. <https://www.kisvalue.com/web/index.jsp>(검색일: 2019. 7. 22).
- knoema. "Top Vehicle Manufacturers in the US Market, 1961-2016." <https://knoema.com/floslle/top-vehicle-manufacturers-in-the-us-market-1961-2016>(검색일: 2019. 7. 17).
- Michelin. 「日本ミシュランタイヤ株式会社」. <https://www.michelin.co.jp/auto/company>(검색일: 2019. 9. 17).
- REGULATION(EU) No. 1309/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on the 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2014-2020) and repealing Regulation(EC), No. 1927/2006.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3R1309&from=EN>(검색일: 2019. 10. 10).
- Reuters. 2018. "Billionaire Gupta looks to make electric cars in Australia." (January 22). <https://www.reuters.com/article/us-australia-ev-gf/billionaire-gupta-looks-to-make-electric-cars-in-australia-id>

USKBN1FB0DF(검색일: 2019. 9. 5).

“Timeline: Holden’s history in Australia.” 2013. ABC News. (December 11). <https://www.abc.net.au/news/2013-12-11/timeline-holden-history/5150240>(검색일: 2019. 8. 11).

UNCTADSTAT. “Data center.” <https://unctadstat.unctad.org/wds/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검색일: 2019. 5. 20).

Wikipedia. “Holden.” <https://en.m.wikipedia.org/wiki/Holden>(검색일: 2019. 8.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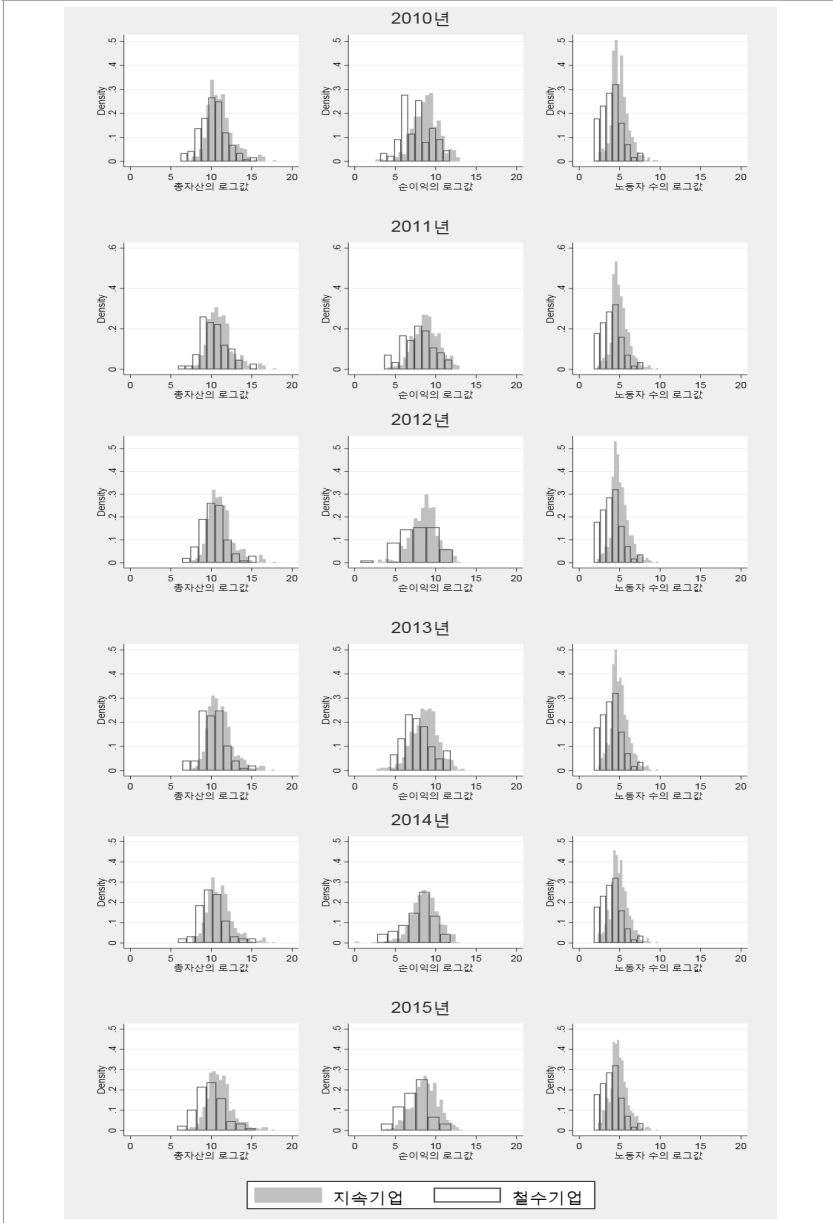
부 록

K
P
E



부록 그림 1. 지속기업과 철수기업 히스토그램 비교(2010~15년)

(단위: 비중(합계=1))



자료: 통계청MDIS, "기업활동조사"(검색일: 2019. 8. 16).

부록 표 1. 산업코드 및 산업명

코드	산업명	코드	산업명
1	농업, 임업, 어업*	25	건설업
2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26	도매 및 소매업
3	금속 및 비금속 광업*	27	육상운송업
4	식품품 제조업	28	수상운송업
5	음료 제조업	29	항공운송업
6	담배 제조업	30	창고 및 운송보조
7	섬유, 의복, 가죽제품 제조업	31	음식점 및 숙박업
8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	32	통신업
9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33	방송업
10	인쇄 및 복제업	34	정보서비스업
11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35	컴퓨터 관리 서비스업 및 출판업
12	화학물질, 화학제품, 의약품 제조업	36	배급업
1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7	금융 및 보험업
1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8	부동산업
15	1차 금속 제조업	39	임대업
16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0	연구개발업
17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제조업	41	전문, 기술 서비스업
18	자동차 제조업	42	공공행정 및 국방*
19	자동차 제외 운송장비 제조업	43	교육서비스업
20	기타 제조업	44	의료 및 보건업*
21	전력, 가스 및 증기업	45	사회복지 서비스업*
22	수도사업*	46	문화서비스업
23	폐수 처리업	47	사회단체*
24	자원재활용서비스업	48	개인 서비스업

주: * 표시된 산업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표본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록 표 2. 지역명 및 지역코드

	기업활동조사
서울	11
인천	23
경기	31
대전	25
충북	33
충남	34
광주	24
전북	35
전남	36
대구	22
경북	37
부산	21
울산	26
경남	38
강원	32
제주	39

자료: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The Economic Effects of MNC (Multinational Corporation) Withdrawal and Policy Responses

Minsoo Han, Hyuk-Hwang Kim, Hyelin Choi, Danbee Park, and Jisu Kim

In May 2018 the permanent shutdown of GM Korea's Gunsan plant heightened social interest in the managemen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It is now well understood that the biggest concern of MNCs is profitability and they do not hesitate to withdraw their subsidiaries from anywhere in the world. Due to domestic and foreign changes such as demographic changes and the rise of emerg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ASEAN, the global economy will see frequent restructuring of the global value chain through the entry and exit of MNCs in the future. Against this backdrop,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olicy directions in response to the withdrawal of MNCs.

To this end, this research conducts case studies on the previous withdrawal of MNCs and estimates the effect of MNCs' activities on the domestic firms in Korea. In particular, we study four cases of the withdrawal that has negatively affected the economies of the host countries - ① withdrawal of Carrefour in Korea ② GM's Gunsan plant closure ③ Michelin's Otta plant closure in Japan ④ GM Holden's plant closure in Australia. The MNCs decided to shut down their plants in response to either deterioration in profitability or changes in the corporations' management strategy.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to prevent the closures of plants, the gap in the bargaining power between the MNCs and the governments of the host countries was also evident. Rather than withdrawing completely, however, MNCs have maintained logistics departments and R&D departments such as design centers in line with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the host countries.

Meanwhile, job loss is one of the central concerns in all of our case studies. Unlike large corporations and capitalists who can diversify their investments between regions and industries, workers and small business owners are more sensitive to the impact of the MNC withdrawal because they are more subject to the restrictions on movement between regions and industries. In addition, the labor market rigidities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workers in normal times can even have a substantial effect on the labor market when MNCs close their plants. If the withdrawing MNCs were able to gradually reduce the level of employment as profitability deteriorated in advance, the closure of plants would not have a steep effect on the labor market.

As highlighted in Chapter 4, the activities of foreign-invested firms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employment of domestic firms. In particular, the domestic firms in upstream industrie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In light of the recent restructuring of GM Korea and concerns about the production cliff of Renault Samsung Motors, our estimation results highlight the potentially substantial effects of the MNC withdrawal from the comprehensive machinery industry. For example, there could be a negative impact on the employment of domestic small and medium-sized firms in the upstream industries that supply parts to the automobile corporations.

In the long run,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response to the entry and exit of MNCs, thereby en-

hancing the growth engine of our economy. Moreover, our case studies and empirical analysis also suggest the implementation of more aggressive fiscal support and assistance programs for rapid sectoral and employment adjustment through re-education, re-employment, and technology development for workers and mid- and small-sized firms in the related industries and the local communities. Among others, our proposed policy measures are a more comprehensiv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s as in the case of the EU's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 and the purchase of goods through a procurement market to strengthen the regional economy after the withdrawal of MNCs. In addit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policy measures to make sure that MNCs agree to the terms and conditions imposed on an agreement that must be satisfied to receive FDI incentives and benefits. To do that, the upward legislation of the refund regulation on cash aid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should be implemented.

한민수(韓敏洙)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및 석사
미국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장
(現, E-mail: mshan@kiep.go.kr)

저서 및 논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공저, 2017)
“The Effects of US Sectoral Shocks through the World Input-Output
Network”(2019) 외

김혁황(金赫瓚)

송실대학교 경제학 석사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원
(現, E-mail: hh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공저, 2017)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공저, 2018) 외

최혜린(崔慧璘)

연세대학교 경제학/경영학 학사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경제학 석사 및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송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조교수
(現, E-Mail: hlchoi@ssu.ac.kr)

저서 및 논문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공저, 2017)
『금융불안지수 개발과 금융불안요인 변화 분』(공저, 2018) 외

박단비(朴丹비)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및 박사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조교수
(現, E-Mail: park530@kangwon.ac.kr)

저서 및 논문

*Credit Rating and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to Equity Markets:
Evidence from the Emerging Market*(공저, 2017)

『한중일 3개국의 그린필드형 해외직접투자의 대상국 특성에 따른 실증분석:
국가위험을 중심으로』(공저, 2019) 외

김지수(金知秀)

KDI국제정책대학원 개발정책학 석사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연구원

저서 및 논문

『개방경제에서의 금융혁신 파급효과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의 시사점』(공저, 2018) 외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19년

- 19-01 미국 통화정책의 국제전이: 뉴스와 노이즈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
김경훈 · 김원기
- 19-02 남·북·중 경제협력 방안 연구 /
이현태 · 최유정 · 최재희 · 김태만 · 림금숙 · 백지운 · 서봉교 ·
안국산 · 원동욱 · 이왕휘 · 이현우 · 이현주 · 최필수
- 19-03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연계 방안 /
한홍열 · 윤성욱 · 박지원 · 정은이
- 19-04 중동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
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정재욱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 19-05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
권율 · 정지선 · 허윤선 · 송지혜 · 유애라 · 김미림
- 19-06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 연구: 직업교육 ODA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 박영호 · 정재욱 · 김예진 · 정민지 · 황규희
- 19-07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
문진영 · 나승권 · 이재호 · 이성희 · 김은미
- 19-08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무역에 관한 연구 /
이규엽 · 강준구 · 박지현 · 박현
- 19-09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
최장호 · 최유정 · 김범환 · 임수호
- 19-10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
강태수 · 정영식 · 김경훈 · 강은정
- 19-11 원청-하청 간 거래관행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독일·미국의 자동차산
업을 중심으로 / 조동희 · 강구상 · 권혁주 · 문성만
- 19-12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 방안 연구: 러시아를 중심으로 /
박정호 · 정민현 · 강부균 · 정동연 · 김초롱 · 제성훈 ·
세르게이 루코닌 · 예카테리나 자클랴즈민스카야
- 19-13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김종덕 · 윤여준 · 권혁주 · 정민철 · 김유리 · 황운중 · 김경훈 · 김원기

- 19-14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
정영식 · 김정곤 · 한형민 · 정재완 · 이정미 · 김제국 · 윤지현
- 19-15-1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제1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 /
김규판 · 강구상 · 김종혁 · 오태현 · 이현진 · 손원주
- 19-15-2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제2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제도 / 김현수 · 강민지 · 이정은 · 이용규
- 19-16 포용적 무역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연구 /
구경현 · 오수현 · 박혜리 · 김민성 · 황운중
- 19-17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
조문희 · 배찬권 · 김영귀 · 금혜윤 · 엄준현
- 19-18 중국 지방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
이상훈 · 김홍원 · 최지원 · 김주혜 · 최재희
- 19-19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
정형곤 · 이철원 · 박민숙 · 전봉길
- 19-20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 /
현상백 · 조고운 · 오윤미 · 이효진
- 19-21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윤덕룡 · 이동은 · 이진희
- 19-22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
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김효상 · 양다영 · 강은정
- 19-23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 분석 /
안성배 · 한민수 · 김수빈, 이진희
- 19-24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대응 방안 /
한민수 · 김혁황 · 최혜린 · 박단비 · 김지수
- 18-01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
정영식 · 김경훈 · 김효상 · 양다영 · 강은정
- 18-02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
이수영 · 최혜린 · 김혁황 · 박민숙 · 남시훈
- 18-03 디지털혁신의 국제비교와 시나리오별 무역영향 분석 /
최낙균 · 이규엽 · 김혁황 · 장운중

■ 2018년

- 18-04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자본유출입 안정화방안 / 강태수 · 김경훈 · 서현덕 · 강은정
- 18-05 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 박성일 · 정재완 · 이재호 · 김제국 · 김미림
- 18-06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축통화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 윤덕룡 · 김소영 · 이진희
- 18-07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 문진영 · 나승권 · 이성희 · 김은미
- 18-08 소득주도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 조동희 · 김종혁 · 김홍중 · 문성만 · 윤여준 · 임유진
- 18-09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 정지원 · 정지선 · 이주영 · 유애라
- 18-10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중동 협력 확대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 18-11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분석과 한국의 농정경험을 활용한 정책제안 / 박영호 · 정재욱 · 김예진
- 18-12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 정형곤 · 김병연 · 이 석 · 조남훈 · 이정균 · 김범환
- 18-13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러 신경제협력력 방향 / 박정호 · 강부균 · 민지영 · 세르게이 루코닌 · 올가 쿠즈네초바
- 18-14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 최장호 · 최유정 · 임소정 · 이효영
- 18-15 한국의 대인도 수출경쟁력과 애로요인 분석 / 조충제 · 송영철 · 이정미 · 윤지현
- 18-16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 현상백 · 박민숙 · 박진희 · 조고운 · 김부용
- 18-17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 배찬권 · 엄준현 · 정민철 · 이장완
- 18-18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 이규엽 · 조문희 · 강준구 · 강민지
- 18-19 한·중·일 산업협력 방안: 4차 산업혁명·전자상거래·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 김규판 · 이현태 · 오윤미 · 김승현 · 이정은

- 18-20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
서진교 · 김종덕 · 박지현 · 김민성 · 안덕근
- 18-21 개방경제하에서의 금융혁신 파급효과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의 시사점 /
안성배 · 김효상 · 신희비 · 김지수 · 장희수
- 18-22 금융불안지수 개발과 금융불안요인 변화 분석 /
정영식 · 최혜린 · 양다영 · 강은정 · 고덕기
- 18-23 ASEAN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
라미령 · 신민이 · 신민금 · 정재완 · 김제국
- 18-24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조문희 · 김영귀 · 구경현 · 박혜리 · 금혜윤
- 18-25 한국의 대(對)동남아 소비재 수출 활성화방안: 한중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최보영 · 이수영 · 이형근 · 이보람 · 이정은
- 18-26 중국 인터넷융합 전략의 특징과 지역 사례 연구 /
이상훈 · 김홍원 · 김주혜 · 최재희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8만원		4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gh@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The Economic Effects of MNC(Multinational Corporation) Withdrawal and Policy Responses

Minsoo Han, Hyuk-Hwang Kim, Hyelin Choi, Danbee Park, and Jisu Kim

인구구조의 변화, 신흥국의 부상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진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국적기업의 철수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본 연구는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다국적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과정, 철수 배경, 철수 이후 반응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철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의 경영활동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9 788932 217574



ISBN 978-89-322-1757-4
978-89-322-1072-8(세트)

정가 7,000원